

현안분석 2007-

비교법제 연구 07-09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IV)

- 이탈리아 -

김시홍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IV)

- 이탈리아 -

A Study on Educational Legislation of EU(IV)

- Italy -

연구자 : 김시홍(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Kim, Si-Hong

2007. 10.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국문요약

이탈리아의 교육제도는 유럽에서도 전통방식을 고수하여 산업화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온 것으로 비판받아왔다. 인문주의적 세계관에 충실하여 역사와 문학 그리고 철학 분야에서의 기본적 소양 교육이 잘 이루어진 반면, 실용적 학풍에서 여타의 산업국가들에 비해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19세기 말 통일 이탈리아의 교육기본법인 카사티법(1959)은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국민 절대다수가 문맹인 상태를 퇴치하고자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도모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 파시즘체제기에 만들어진 젠틸레개혁법(1923)은 교육의 중앙화와 통제를 기반으로 자연과학과 수학을 경시하는 반면 역사와 철학에 비중을 두는 교과과정을 채택하였다.

젠틸레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1980년대 이후에 와서야 현실화되었는데, 이탈리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여, 1990년대 말에는 중도좌파 정부의 베를링게르 교육개혁(1997)을 통해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2001년에 들어선 우파정부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위주의 지원에서 교육의 주자치를 선호하였다. 모랏티 교육개혁(2003)은 그러나 교원신분의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대학의 교원과 연구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직면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였다. 2006년에 재집권한 중도좌파는 앞선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조치들을 봉쇄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의 교육개혁 조치들은 비록 정부의 성격에 따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세계화와 유럽통합이라는 외부적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치원 교육의 강화, 의무교육연한의 증가, 실험적 교과과정의 운영 등을 통

해 경쟁력과 효율성의 회복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현시적인 개선은 대학에서 나타나는데, 볼로냐 프로세스(1999)의 정신에 부합된 새로운 학위제도를 채택하였다. 즉 기존의 학부 단일학위체제에서 1기 학사 과정 3년, 2기 전문라우레아 2년 그리고 3기 연구박사학위 3년이라는 국제적인 기준을 수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교육제도가 이상과 같은 노력을 통해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이행기에 있으며 지속적인 법개정이 이어지고 있는 관계로 안정적으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게 한다. 이의 개선을 위해 정보지식산업화와 지역 친화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기존 교육기관들의 보다 많은 협조와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키워드 : 이탈리아, 교육제도, 카사티법, 젠틸레개혁, 베를링게르개혁, 모
랏티개혁, 볼로냐 프로세스, 학위제도**

Abstracts

Education system in Italy has been criticized in the sense that it insisted on the classical and traditional way, putting too much emphasis upon history and philosophy, hence could not meet properly to the need of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Casati Act(1859) was adopted as a educational basis of Unified Italy in the late 20th century, which was largely regarded as a centralizing force in terms of administration. Since at that time the supreme order of the newly born nation was to eradicate the illiteracy of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primary education was widely diffused in due time. Gentile Reform of 1923 had marked another milestone for the Italian education system. It was highly centralized and controlled by the state and neglected those subjects of mathematics and natural sciences.

Major reforms to the Gentile system has been realized in the 1980s when Italy faced internationalization of her economy and European integration processes. From that time on, a series of education reforms have been made by the successive governments of the Center-left and the Center-right. Despite the discrepancies of ideological and political orientation,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al reforms could be figured out. First of all, they are strongly centered on the streamline of administration and cutting cost strategy. Secondly central as well as local agencies are eager to adopt experimental programs in the diverse levels of school to face the European criteria. Thirdly university degree system changed fundamentally dividing laurea into two sub degrees as breve laurea and laurea specialistica. In this way Italy is considered as a

country who meets quite well the standards of Bologna Process(1999).

In sum this study shows us that how Italy has made different efforts in the area of education to adapt to new situation of globaliz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and has been largely successful in so doing.

Key Words : Italy, Education System, Casati Law, Gentile Reform, Berlinguer Reform, Moratti Reform, Bologna Process, Degree System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s	5
제 1 장 서 론	9
제 2 장 이탈리아 통일 이후 교육제도 변천	13
제 1 절 카사티법	13
제 2 절 젠틸레개혁과 라테라노협약	16
제 3 절 공화국시대의 교육	21
제 3 장 1990년대 베를링게르 개혁	27
제 1 절 교육현황과 주요 쟁점	27
제 2 절 초·중등교육제도의 개편	29
제 3 절 대학입학자격시험의 변화	32
제 4 절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형평	33
제 5 절 대학의 자율과 개혁	35
제 6 절 개혁의 성과	41
제 4 장 2003년 모라티 개혁	43
제 1 절 교육제도의 목표와 성격	45
제 2 절 취학연한과 수학기간 및 졸업연령	46

제 3 절 교육제도의 근간	46
제 4 절 교육의 지속성	48
제 5 절 교육의 선별성	48
제 6 절 분절된 제도	50
제 7 절 탈중심적 제도	51
제 8 절 관료제적 제도	52
제 5 장 교육제도의 유럽화: Bologna Process를 중심으로 ...	53
제 1 절 배 경	53
제 2 절 전개과정	54
1. 베를린 회의(2003)	54
2. 베르겐 회의(2005)	56
3. 런던 회의(2007)	57
4. 유럽연구대학연맹	58
제 3 절 이탈리아 대학교육의 유럽화	61
제 6 장 현행 교육제도	65
제 1 절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67
제 2 절 대학교	72
1. 이탈리아 대학제도	74
2. 대학의 조직	74
3. 학위제도	76
제 7 장 결 론	83
참 고 문 헌	91

제 1 장 서 론

근대국가에서 교육은 인간과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19세기 초 자본가들은 교육의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는 교육과 노동의 함수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교육의 보편화를 통해 자본주의의 성장에 요구되는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의도에서 의무교육이 일반화되었다. 당시의 독일과 영국 및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교육이 확산되었고 의무화되었다. 독일의 경우 초등, 기술, 중등 및 대학교육이 실용적인 차원에서 조직되었으며, 중앙집권화된 형태를 보여 사립학교의 공간은 적은 편이었다. 반면 영국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교육에 관심을 기울였고, 생산의 발전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 혁명의 영향으로 대중교육이 확산되었으며, 1850년 과유법에 의해 사교육의 영향, 특히 가톨릭사제들의 교육에 대한 입김이 강화되었다.¹⁾

이탈리아의 경우 1860년대에 달성한 통일이후에도 교육과 노동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통일이전의 이탈리아에서는 1848년 나폴리에서 최초로 자율적인 교육부가 탄생하였다. 19세기 초의 교육은 본당구역 당 하나의 학교를 사제들이 관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중등학교는 여러 수도단체에서 운영하였는데 이들은 반종교개혁이후 탄생한 기관들이며 주요한 현(*provincia*)의 중심도시에 설립되었다.²⁾ 한편 피에몬테는 통일이전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유일하게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지역이었다. 그러나 경직화된 운영과 중앙집권화된 행정체계는 교육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1) 황규호 외, □□세계의 교육과 중등사학□□, 성문사, 1998, 19, 79 & 131쪽.

2) A. Semerato, *Il sistema scolastico italiano. Profilo storico*, Roma: La Nuova Italia Scientifica 1996, pp. 16-17.

20세기 후반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교육의 전통이 강한 인문주의에 기초하여 실용성을 결여하였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고, 대중교육의 확산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탈리아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 규모가 1995년 국내총생산의 5.1%에서 2003년에 4.6%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5.2%를 하회하는 수준이다.³⁾ 또한 전체 지출의 약 66%가 초중등교사의 급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OECD 평균인 63.6%보다 다소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2004년도 기준으로 수학연령기의 인구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자의 비중은 80% 규모인데 이는 여타 산업국가와 비슷한 수치로 이해된다. 20세에서 29세 인구 중에서 대학과정에 등록한 사람의 통계는 2003년 19.3%를 보였는데, OECD 평균인 24% 보다는 많이 밀도는 수준이다. 또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최종적으로 졸업을 하는 비중이 40%를 조금 넘고 있으며 4년의 학위과정을 7년에서 10년 만에 졸업하는 자들(*fuori corso*)이 다수 포진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집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최근에는 3년 과정의 학사학위를 개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단 고용되면 영구직화하는 대학의 연구원(*ricercatore*)과 교수진에 대한 개혁을 통해 경쟁체제를 채택하였으며, 두뇌유출의 현상을 되돌리기 위해 해외에 산재한 우수한 이탈리아 인력을 초빙하는 제도(*visiting professorship*)를 도입하였다.⁴⁾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시대의 교육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이탈리아의 교육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과제를 법제적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3)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6*, Paris.

4) EIU, *Country Profile Italy 2007*, London: The Economist, 2007, p. 25.

이를 위해 통일이후의 교육사를 개략적으로 서술할 것이며, 이어서 1990년대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과제들, 즉 교육제도의 개편, 대학입학자격시험의 변경안, 공·사립학교의 형평성문제, 대학의 자율과 개혁 등을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다. 또한 교육개혁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평가·제시하고 유럽통합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전망하고자 한다.⁵⁾ 국내에서 이탈리아의 교육제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일천하다. 일부 논문에서 제한적인 소개가 있어왔지만⁶⁾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부족하였다. 이 연구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5) A. Monasta, "Italy", p. 228 in C. Brock and W. Tulasiewicz(eds.), *Education in a Single Europe*, London: Routledge, 2000, 2nd Ed.

6) 김시홍, "이탈리아의 교육제도 개혁", □□서유럽연구□□, 1998(4): 133-64.; 안영옥, "이탈리아의 교육제도", 275-306쪽, 정종화(편), □□유럽연합국가들의 교육제도□□, 법문사, 1997.; 최보신, "이탈리아의 교육제도", 57-77쪽, 효성여대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집□□, 1994.

제 2 장 이탈리아 통일 이후 교육제도 변천

제 1 절 카사티법

이탈리아의 통일이 반도 북서부에 위치한 피에몬테지방의 사르데냐 왕국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통일이후의 모든 행정도 피에몬테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교육분야의 경우 1859년 11월 13일 교육부장관이었던 카사티(Casati)에 의해 기본적인 형태가 마련되게 된다(Legge Casati, 13/11/1859 n. 3725).⁷⁾ 카사티법은 교육행정이 소수의 상층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즉 교육부장관과 교육부의 최고평의회, 그리고 각각 대학과 중등학교 및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3명의 일반장학관이 모든 행정을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중앙집권화를 가능케 하였다. 다만 기술학교의 경우 과거에는 초등학교 장학관이 맡던 것을 중등과정 장학관으로 이전된 것이 새로운 점이였다. 지방에서는 현차원의 교육위원회가 유일하게 존재하였지만 중앙의 통제를 받아 업무를 이행하는데 그쳤다.

당시에 카사티법이 참고한 교육모델은 세 가지였다. 영국모델은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사교육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으며, 독일모델은 국가가 모든 다른 분야에 대해 우위에 서는 이상주의 철학에 근거한 것이었다. 세 번째의 모델은 벨기에식이었는데 이는 사교육이 공교육과 경쟁관계에 서는 것이었다. 이중에서 카사티법은 외형적으로 중간의 방법이라 볼 수 있는 벨기에 모델을 채택하였다. 이는 역사적으로 가톨릭교육의 전통이 강한 이탈리아에서 공교육만으로는 산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도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카사티법의 한계는 이탈리아를 통일한 지배계급의 한계와 일치하였다. 통일 이탈리아에서 지배계급은 통일과정을 주도하였던 실용주의적 노선의 온건파가 역사적 우익(*la destra storica*)으로, 그리고 공화주

7) http://www.classico.biella.it/legge_casati.htm에서 2007년 10월 15일 검색.

의를 내걸면서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주도권 장악에 실패한 급진파가 역사적 좌익(*la sinistra storica*)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⁸⁾ 따라서 통일은 북부의 산업자본가계급이 남부의 토지귀족과 결탁한 사회변화이며 남부의 토지귀족은 농민들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결국 북부의 남부에 대한 지배 및 영향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⁹⁾ 그람시는 리소르지멘토 과정에서 광범위한 농민대중의 참여가 결여된 형태를 수동적 혁명(*rivoluzione passiva*), 즉 급진 부르주아가 대중과의 연대에 실패한 것으로 해석하였다.¹⁰⁾

이러한 상황은 일반 대중의 높은 문맹률과 연결되면서 사회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871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에서 문맹률이 80%에 근접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보면 북부의 경우 62%인 반면에 남부는 84%를 상회하여 통일과정에서 남부가 소외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19세기 후반기의 교육현실에서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현실은 지식인 실업과 학교체계와의 상관관계이다.¹¹⁾ 이탈리아에서 고학력자의 실업난은 최근에 제기된 것이 아니며 그 역사가 백년이 넘는 문제이다.

높은 지식인 실업률은 당시의 대학교육이 일반적 문화습득을 강조하는 인문주의적 전통에 치중한 결과 전문화된 엘리트를 육성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¹²⁾ 일반 국민의 높은 문맹율과 지식인층의 높은 실업률은 통일이후의 이탈리아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였으며 최근까지도 지속된 사회적 쟁점이다.

8) A. Berselli, *Italia legale e Italia reale. La destra storica dopo l'Unità*, Bologna: il Mulino, 1965, prefazione.

9) 정문수, “이탈리아통일운동을 보는 하나의 시각 : 부르조아 자본주의 변혁론”, □□부대사학□□ 1990(14): 190.

10) 안토니오 그람시(이상훈 역), □□옥중수고Ⅱ□□, 거름, 1993, 80쪽.

11) M. Barbagli, *Disoccupazione intellettuale e sistema scolastico in Italia*, il Mulino, 1974. A. Semerato, op. cit., p. 29에서 재인용.

12) A. Cammelli, "Universities and professions", in M. Malatesta(ed.), *Society and the Professions in Italy, 1860-1914*,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5, p. 32.

종교문제에 관한 카사티법은 기본적으로 중도적 입장을 취했다. 한편으로는 교육의 비가톨릭성(laicità)을 강조하여 국가가 통제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교육적 차원에서의 종교를 인정하였다. 이로써 비가톨릭 종교를 도외시하고 비종교인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종교교육은 부모의 결정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비가톨릭 학생들의 경우 가톨릭적 교리문답을 받을 의무는 없었다. 교과과정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실증주의에 입각한 실용교육이 도입되었으나 대체로 인문주의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급변하는 자본주의의 현실에 적응치 못하는 문화지체현상을 노정하였다. 교사들은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급여에 시달렸는데, 교사자리는 자격증보다 공중도덕성을 더 중요시하여 주관적인 방향으로 치우쳤으며, 교사급여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남녀별로 상이한 수준이었다. 또한 카사티법은 교사급여의 최저치를 상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시(comune)당국은 최저치를 최대치로 적용하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표 1> 카사티법(1859)에서의 이탈리아 교육제도¹³⁾

6세 입학	초급 초등학교 2년과정 (Scuola elementare inferiore)	의무교육
	상급 초등학교 3년과정 (Scuola elementare superiore)	무상교육
	기술학교(Scuola tecnica) 3년과정	중학교(Ginnasio) 5년과정
사범학교 (Scuola normale) 2+1년 과정	기술고등학교(Istituto tecnico) 3년과정	고등학교(Liceo) 3년과정
대학교(Università)		

13) Livia Giacardi, "From Euclid as Textbook to the Giovanni Gentile Reform (1867 - 1923): Problems, Methods and Debates in Mathematics Teaching in Italy", *Paedagogica Historica* Vol. 42, Nos. 4&5, August 2006, p. 588.

카사티법에 나타난 교육제도의 근간은 의무교육을 초등과정 전반 (Scuola elementare inferiore)을 2년으로 하고 후반부(Scuola elementare superiore) 3년 과정을 무상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통일 이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문맹의 퇴치와 경제발전이 급선무이긴 했으나,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등과정은 기술분야와 인문계로 이분화하여, 기술학교(Scuola tecnica) 3년을 마친 학생들은 사범학교(Scuola normale)로 진학하거나 기술고등학교(Istituto tecnico)로 가게 했으며, 인문계의 중학교(Ginnasio)과정 5년을 수료한 학생들은 고등학교(Liceo)에 입학하게 하였다. 그러나 기술계로 진학한 학생이 경우에도 해당 전공분야인 자연과학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제 2 절 젠틸레개혁과 라테라노협약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탈리아교육은 적지 않은 개선과 향상을 이룩하였다. 초등학교의 의무교육화와 국립학교화가 이 시기에 실현되었으며, 대학생의 숫자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등장한 파시즘체제는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권위주의로의 회귀였는데, 라테라노협약을 통한 가톨릭 세력과의 화해, 그리고 독일식 이상주의가 전체주의 체제와 만난 것이었다. 1920년대 초엽에 교육부 장관을 맡은 인물은 크로체, 아닐레, 젠틸레 등이었는데, 이중에서도 파시즘체제 최초의 교육부장관이었던 젠틸레(Giovanni Gentile)가 1923년에 제시한 교육개혁안이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⁴⁾ 개혁안의 요지는 교육행정의 수직화와 강화된 중앙집권주의, 지방교육행정을 현담당관에서 주담당관으로 교체한 점, 50년이 지나

14) 젠틸레 교육철학의 이상주의적 측면은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라: G. Gentile, *The Reform of Education*, New York: Harcourt, Brace & Co. 1922.; la Legge 21/31/1923 n. 3126.

서야 없어지게 되는 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밀정보노트작성(note di qualifica), 교사와 교수의 법적 신분보장의 약화, 교사와 교수에 대한 국가충성서약, 중등 및 대학교수의 결사권 금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Regio Decreto 6 Maggio 1923, n. 1054).¹⁵⁾

<표 2> 젤틸레 개혁의 이탈리아 교육제도¹⁶⁾

3세 입학 초등교육 준비과정 3년 Grado preparatorio dell'istruzione elementare				
초급 초등학교 3년과정 (Scuola elementare inferiore) 14세까지의무교육 무상교육 상급 초등학교 2년과정 (Scuola elementare superiore)				
초등학교 통합과정 Corso integrativo della scuola elementare 3년	보충학교 3년 Scuola complementare	초급중학교 3년 Ginnasioinferiore	초급사범 학교4년 Istituto magistrale inferiore	초급기술 학교 4년 Istituto tecnico inferiore
여성고 3년 Liceo femminile	과학고 4년 Liceo scientifico	상급중학교 2년 Ginnasio superiore	상급사범 학교 Istituto magistrale superiore 3년	상급기술 학교 4년 Istituto tecnico superiore
인문고등학교 3년 Liceo classico				
대학 Università				

15) Ordinamento della istruzione media e dei convitti nazionali, Gazzetta ufficiale 2 Giugno 1923 n° 129 ([http://www.territorioscuola.com/download/Regio_Decreto_6_Maggio_1923_n_1054_\(Riforma_Gentile\).pdf](http://www.territorioscuola.com/download/Regio_Decreto_6_Maggio_1923_n_1054_(Riforma_Gentile).pdf))에서 2007년 10월 10일 검색)

16) Livia Giacardi, op. cit, p. 611

개혁을 통해 초등학교의 구조가 변경되었는데, 의무연한이 아닌 유치원교육(*grado preparatorio*),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초급과정(*grado inferiore*), 4학년과 5학년의 상급과정(*grado superiore*), 6년차에서 8년차까지의 초등학교 졸업 후의 통합과정(*corso integrativo post-elementare*) 등으로 구분되어 의무교육이 만 14세까지로 연장되었다.¹⁷⁾ 초등학교의 교육철학은 종교에 기초하여 신성성과 섭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었으며, 사물과 도덕적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중등학교의 경우, 국가시험의 도입, 사립학교의 자율성 제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우위적 지위 및 인문교육의 강화, 기술문화와 기술학교에 대한 평가절하 등이 도입되었다. 젤틸레개혁의 핵심부분은 인문계 고등학교(*liceo classico*)였는데, 인문계는 특권화되고 소수에게만 개방되었으며 모든 대학의 학부(*facoltà*)와 연계되었다. 인문과학 중에서도 철학이 가장 우위에 놓였는데, 이는 유럽적 이상주의의 이념을 교육적인 형태로 변경한 것으로서, 독일에서 헤겔의 이상주의를 훔볼트가 구체화한 작업과 유사한 것이었다. 자연과학로서의 물리학과 수학은 역사와 철학의 시녀가 되었으며 역사철학이 중요시되었다. 사범학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는데, 우선 신입교사에게는 전문직업적 식견보다는 영성적 능력을 요구하였으며, 인문·철학분야에 대한 강조와 함께 라틴어의 도입 및 심리학의 폐지로 연결되었다. 개혁안에서 교육학은 철학의 한 분야로 인정되었으며 교생실습제도는 중단되었다. 젤틸레는 대학지원안도 변경하여 대학을 국가의 보조정도에 따라 완전보조, 부분보조 그리고 아무 보조도 없는 학교로 나누고, 오직 1등급의 평가를 받은 대학에게만 충분한 행정적·교육적 자율성을 보장하였다.¹⁸⁾

17) A. Semerato, *op. cit.*, p. 61.

18) Regio Decreto 44 giugno 1938, n. 1269, "Approvazione del regolamento sugli studenti, i titoli accademici, gli esami di stato e l'assistenza scolastica nelle università e negli istituti superiori".

〈표 3〉 젤틸레 개혁의 중, 고등학교 과목별 시간표¹⁹⁾

과목/학년	중학교(Ginnasio)				
	1	2	3	4	5
이탈리아어	7	7	7	5	5
라틴어	8	7	7	6	6
희랍어	—	—	—	4	4
외국어	—	3	4	4	4
역사와 지리	5	5	4	3	3
수학	<u>1</u>	<u>2</u>	<u>2</u>	<u>2</u>	<u>2</u>
계	21	24	24	24	24
과목/학년	고등학교(Liceo)				
			1	2	3
이탈리아어			4	4	3
라틴어			4	4	3
희랍어			4	4	3
역사			3	3	3
철학과 정치경제			3	3	3
수학과 물리			<u>4</u>	<u>4</u>	<u>5</u>
이학, 화학, 지리			3	2	3
예술사			—	2	2
계			25	26	25

젤틸레 교육개혁은 20세기를 마감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고등교육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큰 것이었다. 그러나 영향력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다는 부정적인 현실로서 수용되어 왔다. 우선 교육인구가 일반인구의 증가율을 앞서 나감으로써 교육받은 계층의 실업현상이 영구화하게 되었다. 개혁은 노동자의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는 대신 화이트칼라계층의 자녀들을

19) Livia Giacardi, *op. cit.*, p. 610.

대폭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시켰다. 또한 교육과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심화시켰고, 인문계고교 비해 기술고교를 경시하여 학생 수의 감소현상을 불러와 기술변화에 이탈리아 사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전통을 만들게 되었다. 결국 과학과 기술의 두 문화가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함으로써 인문교육 자체도 말뿐이고 수사에 불과한 문화를 창출하여 비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1929년에 파시즘체제와 바티칸 사이에 체결된 라테라노협정은 교육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쳤다.²⁰⁾ 협정의 내용은 조약, 종교협약 및 재정적 타결로 구성되는데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종교협약(il Concordato)에서 찾을 수 있다. 공립초등학교와 사제, 수사, 평신도에 의해 인가된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허락됨으로써 가톨릭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로써 가톨릭의 교리는 이탈리아 학교체계 내에서 윤리교육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1939년 파시즘평의회에서 통과된 학교헌장(la Carta della scuola)은 공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다. 학교헌장의 새로운 면모는 여러 종류의 중학교정을 하나로 통일하여 운영하는 점, 불우청소년과 영재들을 위한 학교의 설립, 지식교육에 대한 보완으로서의 체육교육의 도입, 그리고 다양한 교육센터의 운영 등이었다. 이상의 헌장에 대하여 가톨릭 세력은 가족의 중요성, 라틴어의 강조, 중등교육에서의 인문적 문화, 남녀학교의 분리 등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교육에 있어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경계의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가톨릭계 사립학교들이 국가와 긴밀한 협조체제에 있다는 차원에서 공공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회가 양보할 수 없었던 부분은 인종주의에 대한 파시즘체제의 입장이었다. 또한 교육학자들도 인종주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20) 김시홍, □□이탈리아 사회연구 입문□□, 명지출판사, 1995, 121-2쪽.

제 3 절 공화국시대의 교육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인 1943년 7월 25일 파시즘체제가 붕괴되었으나, 그 유산은 민주이탈리아의 교육사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 전체주의 치하에서도 학교와 대학은 교조주의와 체제의 획일주의에 대하여 지적인 저항을 한바 있었다. 반파시즘운동기에도 교육을 통한 개혁의 중요성은 간과되지 않았으며 이를 새로운 통일운동(nuovo Risorgimento)적 차원에서 시도하였다. 그러나 반체제운동이 서로 단일화되지 못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은 19세기말의 통일이탈리아에서부터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교육에 대하여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어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열적 전통은 1945년 해방을 맞이한 후에 새로운 국가형성의 과정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민족해방위원회(Comitati di Liberazione Nazionale)의 활동을 통해 좌우가 합작하여 노력하고 새로운 공화국 형성과정에서 기민당(Democrazia Cristiana)과 좌파정당들이 함께 연정을 구성하여 헌법의 성격을 좌우파가 공히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발전적인 것이었으나, 미국의 마샬플랜을 통한 유럽에의 원조 그리고 미국과 소련을 맹주로 하는 냉전체제의 본격적인 도입은 이탈리아에서 좌우합작을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대체적으로 보아 우파의 정당들은 공사립체제를 옹호하면서 사립학교로서의 가톨릭계 학교들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던 반면, 중도나 좌파의 정당들은 교육의 비가톨릭성을 지지하였고 일부는 모든 학교의 국공립화를 주장하였다. 헌법 제정과정에서 교육부분에 대한 쟁점은 라테라노협정에서 체결된 협약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즉 가톨릭교회에 대한 배타적인 우위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가 초점이 되었다. 헌법 제정 당시의 좌익은 가톨릭이 국가의 중

교(religione di Stato)로서 대우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사회당(Partito Socialista Italiano)은 농업개혁이 중요한 문제이지 교회와 국가의 관계정립은 이차적이거나 사소한 문제라고 보았으며, 공산당(Partito Comunista Italiano) 역시 교회에 대한 조문이 헌법에 첨부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반면에 기민당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여 결국 라테라노협정의 내용이 공화국의 헌법에서도 그대로 인정받게 되었다.²¹⁾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지지입장과 유보적 입장 그리고 반대의 입장 등이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이는 국가의 교육독점과 사립학교의 존재위상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헌법 제정과정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공화국 헌법 제 33조 3항은 ‘단체와 개인은 국가에 부담을 과하는 일이 없이(senza oneri per lo Stato) 학교와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4항에서는 ‘법률은 균등한 자격을 요구하는 비국립학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며, 또 그 학생에 대하여서도 국립학교 학생의 그것과 균등한 수확상의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함으로써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계 사립학교의 자유와 비가톨릭교도들을 위한 학교의 자유가 상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까지는 기민당 중심의 중도주의가 교육현실에 반영되는 시기였다. 정책에 있어 중도정부의 최우선순위는 교육이 아니라 경제재건을 통한 산업의 발전이었기 때문에 낙후된 이탈리아 남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해 사용되었지, 학교건물을 필요한 만큼 짓는 것은 요원한 상황이었다. 과밀

21) 공화국 헌법 제7조는 ‘국가와 가톨릭교회는 각각 그 고유의 질서 내에 있어 독립이며 주권적이다. 그 관계는 라테라노 협정에 의하여 규정된다. 쌍방의 당사자에게 수락된 조약의 개정은 헌법개정의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여타 종교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독점적인 지위는 헌법적 보장을 받게 되었다.

학급과 학교시설의 절대적 부족이 이 시기의 교육현실을 대변해주며, 아직도 이백만명이 넘는 문맹자의 수치가 해결되어야 했다. 1951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전체인구의 60%에 해당하는 이천오백만의 인구가 어떠한 학교증서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며, 6세에서 12세 사이의 인구 중에서 30%정도의 인구가 공식적인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였다.²²⁾ 당시의 국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철학은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적(sussidiario) 의미로 이해되었다. 즉 국가는 민간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였는데 이는 헌법의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1963년 사회당의 연정참여는 중도좌파적 개혁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62년 말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과정을 포함하는 만 14세까지의 무상의무교육이 법률적으로 확정됨으로써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위주였던 교육정책이 모든 단계에서 국립학교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중도좌파정부의 교육에 대한 기본입장은 사회에 의해서 표출되는 새로운 가치들에 대한 대응이었다. 즉 생산현장의 요구에 대한 학교와 과학연구의 현대화가 기본 노선이었다. 이는 또한 인문주의적 전통에서 기술 중심의 세계관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민당은 과거식의 가톨릭계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정내의 사회당이 일련의 개혁을 통하여 사회주의로의 점진적 이행을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중도좌파정부는 구조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부분적인 교정적 개혁에 만족해야 했다.

교육의 자율성은 중도좌파시대를 통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행정적 탈중앙화만이 아니라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19세기말 이탈리아 통일기부터의 전통인 교육의 관료적 중앙집권주의는 최고교육평의회(Consiglio superiore

22) A. Semerato, *op. cit.*, p. 119.

della Pubblica Istruzione)를 개선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했다. 또한 지방차원에서 장학관의 권한을 교사들의 대표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현단위학교평의회(Consiglio provinciale scolastico)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구성하도록 만들었다.

교육이 경제발전 및 사회적 진보와 연결되고 이탈리아를 유럽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목적에서 1962년 구이조사위원회(la Commissione d'indagine Gui)가 발족되었는데, 동위원회는 향후 20년간 수행해야 할 교육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까지 포함하려는 의도에서 다양한 교육현실을 다루었다. 대학의 경우 1980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규칙을 마련하게 되는 박사과정(dottorato di ricerca)을 포함하는 학위제도의 세단계화에 대한 밑그림을 이미 당시에 그리고 있었다. 또한 교수의 등급, 학과와 학기제도, 전국대학협회의 제안, 계약교수제의 활용, 대학의 지리적 분배, 자율적 운영 등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인문계와, 기술 및 과학계, 그리고 직업계 학교로의 구분이 시도되었으며, 유치원제도의 개혁안도 마련되었다.²³⁾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위원회의 결과는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이탈리아에서 1968년의 학생운동으로 폭발하게 된다.

1970년대는 탈규제화(deregulation)가 진행되는 시기로 요약될 수 있다.²⁴⁾ 이 시기에 이탈리아에는 신좌파이론인 알튀세의 영향, 대중사회론의 등장, 교육사회학적 접근 등이 채택되어, 교육이 지배계급의 이념을 유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의견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중도우파의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시위, 교사들의 단체행동 등을 유발하여 1960년대의 중도좌파 정부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억압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23) 1970/71학년도에 국립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10만명에 불과하였지만, 사립유치원에는 150만명이 다니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사교육의 절대적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기민당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던 교육정책과 맞물리는 것이었다.

24) A. Semerato, *op. cit.*, p. 183.

종교교육은 탈규제화시대에 중요한 쟁점의 하나였다. 1960년대 말에 이미 사회당은 헌법 제7조의 개정을 통해 종교교육의 선택과목화를 주장한 바 있다. 좌파는 라테라노협정의 정신을 시대의 변화와 민주적 삶의 발전에 따라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이해하며 이와 같은 주장을 펴게 되었다. 1970년대는 좌파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사회의 세속화(secolarizzazione)와 함께 힘을 얻게 되었으며, 급기야 1984년에 라테라노협정의 협약부분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와 바티칸간의 새로운 협약(il nuovo Concordato)이 체결되게 된다.²⁵⁾ 새로운 협약의 기본정신은 교육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종교교육이 의무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다.²⁶⁾

탈규제화시대에서 등장한 또 다른 문제는 공·사립학교의 위상에 관한 것이었다. 공립과 사립의 대립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형평에 기초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로 부상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 유럽에서는 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이것이 사회적 질(la qualità sociale)의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실험성도 부족하여 변화에 저항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25) A. Monasta, *op. cit.*, p. 230.

26) G. Alberigo, *Il cristianesimo in Italia*, Roma: Laterza, 1989, p. 105.

제 3 장 1990년대 베를링게르 개혁

제 1 절 교육현황과 주요 쟁점

이탈리아의 교육제도는 산업화 시대에서 여타의 유럽국가들에 비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²⁷⁾ 낮은 취학율과 상대적으로 짧은 의무교육연한, 대학의 포화현상과 입학생수에 비해 졸업생수가 적은 점 등이 고질적인 과제로 존재하여 왔다. 1960년대에 들어와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나 비효율적인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교육에 대한 양적인 수요만 충족시키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양태는 결국 교육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되어 유럽 내에서 가장 후진적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 인식되었다.

교육제도의 효율성은 다양한 수준에서 학생들이 취득한 결과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문화적 유산에 대한 이해, 졸업장의 취득,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가능성, 상급학교로의 진학가능성 등의 변수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이 항상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학생들이 같은 수준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탈리아의 교육현실에서 학생들 중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 때문에 학업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겠지만, 많은 경우 교육제도의 비효율로 인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최근까지도 의무교육인 중학교 3년 과정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의 수치가 여타의 유럽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나 18%에 이르는 학생들이 1학년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탈락하고 있다. 고등학교에

27) CENSIS, *Il Rapporto CENSIS sulla situazione sociale dell'Italia del 1997*, Milano: Franco Angeli, 1997, p. 12.

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도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재등록하지 못하는 수치가 1995/6학년도에 25.1%에 이르며 2학년의 경우 13.2% 수준이다. 따라서 대학입학생 중에서 정상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5~6년내에 졸업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1989/90년도의 신입생의 경우 1995/6학년도에 35.6%에 그치고 있다.²⁸⁾ 교수 1인당 학생 수의 과다성, 졸업생들의 졸업연도가 지나치게 늦다는 사실, 재학생수는 유럽에서 최고의 수준이나 졸업생수는 최저 수준인 모순 등과 같은 현실은 교육제도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총체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발생한 부패수사와 정치개혁은 경제분야는 물론이고 사회·문화적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전반적인 사회변화이어서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수술을 시도하였다. 즉 취학전 교육과,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과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체계 자체를 뿌리에서부터 재정비하고 개정하였다.²⁹⁾ 교육개혁은 특히 1996년 총선결과에 의해 출범한 중도좌파정부하의 로마노 프로디(Romano Prodi)총리 주도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교육부장관인 시에나대학 총장출신의 루이지 베르링게르(Luigi Berlinguer)는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과 혁신을 통해 21세기를 맞이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서는 초·중등교육제도의 개편, 대학입학자격시험의 변화, 공·사립학교의 형평성 문제, 대학의 자율과 개혁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³⁰⁾

28) ISTAT, *Rapporto sull'Italia. Edizione 1997*, Bologna: il Mulino, 1997, p. 139.

29) G. Rescalli, *Il cambiamento nei sistemi educativi. Processi di riforma e modelli europei a confronto*, Scandicci(FI): La Nuova Italia, 1995, p. xi.

30) la Legge 10/12/1997 n. 425.

제 2 절 초·중등교육제도의 개편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정부중앙부처는 교육부(Ministero della Pubblica Istruzione, MPI)와 대학 및 과학기술부(Ministero dell'Università e della Ricerca Scientifica e Tecnologica, MURST)이다. 교육부는 취학전 교육과 초등교육, 중등교육, 예술교육, 직업교육 및 사회교육을 맡고 있으며, 대학 및 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으로서의 대학교육과 과학, 기술연구를 진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초·중등교육제도의 골격은 통일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변모되어왔다. 그러나 실제적인 중등교육의 경우 1962년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승인을 받음으로써 의무교육연한이 공식적으로 초등학교 5년과 중학교 3년을 포함하여 8년의 과정으로 확정되었다.³¹⁾ 기존의 초·중등교육제도는 <표 1>에서 파악될 수 있다.³²⁾

<표 4> 이탈리아의 교육제도 : 기존제도와 Berlinguer개혁안

기존제도																	
3세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2	3	4	5	1	2	3	1	2	3	4	5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Berlinguer안																
3세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	2	3	4	5	6	1	2	3	1	2	3		
유치원		초등과정					중등과정									

---- 는 의무교육연한(scuola dell'obbligo)

31) A. G. Greco, *L'Università e la scuola italiana*, Torino, Mimeograph, 1997, p. 7.

32) 김시홍, 이탈리아의 민주시민교육: 2005 유럽시민교육의 해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지역학회보□□ 2006, 제6집, p. 36.

교육제도 개혁을 통해 마련된 새로운 초·중등교육제도는 1997년 6월 13일 내각에서 통과되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교육제도는 과거의 방식이 반복적이고 비연속적이어서 효율적이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과과정들이 일련의 논리성을 가지고 연결됨으로써 과정의 이수를 통해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세의 유아는 3년 과정인 유치원(scuola materna 또는 scuola di infanzia)에 입학할 수 있는데, 처음 2년 과정은 선택이지만 마지막 1년은 누구나 수학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의 첫해이다. 다음은 초등과정(il ciclo primario)으로서 각각 2년 과정으로 구성된 3단계(i tre bienni)로 나누어졌다. 초등과정의 시작에서 4년간은 인지발전, 논리력, 언어, 수학, 예술 및 인간관계 등을 교육의 목표로 하며, 마지막 2년 과정은 통합, 심화, 자율적 학습능력 및 원고작성 등의 능력배양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초등과정은 유아과정과 중등과정의 연속선상에서 계속성이 유지되며, 이로써 일련의 과정들을 단일화하고, 비반복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초등과정은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통합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초등과정을 마치면 12세에 중등과정(il ciclo secondario)에 진학하게 된다. 이 중등과정에서 의무교육부분은 3년(primo triennio del ciclo secondario)으로³³⁾ 첫해에는 지향적 가치(forte valenza orientativa)를 습득하도록 한다. 다음 2년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5개 분야 - 인문, 과학, 기술, 음악, 예술 - 중의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중등과정의 후기 3년

33) 이로써 의무교육연한은 5세에서 15세까지의 10년기간이 된다. 그러나 1998년 5월 22일자로 내각에서 잠정 결정된 의무교육연한은 16세까지이며, 1998년 9월부터 바로 실시되었다. 즉 중등학교제도에서 중학교 졸업후 고등학교 5년 과정중에서 처음 2년과정(ginnasio)을 의무교육화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잠정조치의 배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탈리아에 권고한 의무교육연한 18세에는 못미치지만 유럽에서 포르투갈조차도 만 16세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마당에 14세로 묶여 있는 이탈리아의 현실이 지나치게 낙후되었다는 인식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R. Zuccolini, "Da settembre in classe fino a 16 anni", *La Repubblica*, 22 Maggio 1998.

과정에서 심화시키게 된다. 중등과정 전반기의 3년 과정은 의무교육의 마지막 단계로서 통합적 성격을 지니지만, 후반기의 3년 과정을 어느 정도 엄두에 두는 것이며, 마지막 해는 직업훈련과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

상급의 과정에 진학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만 18세까지 직업훈련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등과정의 상위 3년 과정(secondo triennio del ciclo secondario)을 수학하게 되어 마지막 해에 국가시험(l'esame di Stato)을 치름으로써 6년의 중등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새로운 초·중등과정에서 특이할 것은 직업훈련과정을 18세까지로 보장함으로써 학업과정과 직업과정의 두 축(sistema di istruzione/formazione)을 공고히 한 점이다. 이로써 상위 3년 과정은 과정의 중복성을 지양하고, 질적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과정의 장점은 연속되는 과정들에서 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배우는 비합리성을 피할 수 있으며, 수업과목과 학생들의 관심분야를 상호접목시킬 가능성도 증가시킨 점이다. 반면에 직업과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이 내포하고 있던 인문적, 일반적, 형식적인 성격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효율성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개별학교가 인문, 과학, 기술, 음악, 예술 등 분야 간의 전환을 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외부 기관들의 요구나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는데 보다 유연한 통로를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학생 개인의 차원에서도 지역경제의 상황에 걸맞는 선택을 부여하여 고등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학교를 안 다닐 경우에는 직업훈련과정으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 이전의 고등과정이 직업에로의 첫발을 내딛는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꼭 필요하고 적절한 학생들만이 들어가게 되어 과밀화된 대학의 사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본격적

으로 실시된다면 지역과 지역의 일자리 공급 및 교육과정이 서로 원활하게 맞물리는 효율성을 얻을 것이어서, 19세기 통일 이후 고질적인 문제였던 학교와 산업의 불일치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제 3 절 대학입학자격시험의 변화

이탈리아에서 고등학교 졸업시험(*l'esame di Maturità*)은 대학입학자격시험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탈리아의 대학은 거의 모두가 국립대학이며 특정 대학 특정 학과에의 입학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 이러한 대학문호의 개방은 1960년대 말에 시행되었는데 서민층과 일반대중이 보다 용이하게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민주적인 성과를 얻었으나, 대학의 과밀화 현상으로 질적 수월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극도의 비효율성을 보여 왔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통과되기만 하면 원하는 대학의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게 되어 몇몇 학과에 과도한 학생들이 몰리는 기현상을 낳게 되었다.

기존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은 2개의 필기와 하나의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 필기시험(*prove scritte*) 중의 하나는 국어(이탈리아어)이고 다른 하나는 교과과정 중에서 지정된다. 구술시험(*colloquio*)은 2개의 테마에 대해 치뤄지는데 하나는 학생 자신이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시험위원회에서 선택된다. 구술시험의 문제는 전부 4개의 테마로 구성되며 매년 5월 10일까지 교육부에 의해 발표된다. 시험의 평가는 60점 만점으로 매겨진다.

대학입학자격시험에 대한 개혁안은 현재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였다.³⁴⁾ 자격시험의 변화는 사립학교에서 졸업장을 남발하는 현상을 피하고, 시험위원회의 구성문제를 해결하려는 두 가지 차원에서 시도된

34) A. G. Greco, *op. cit.*, p. 13.

것이였다. 과거의 졸업시험이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하는 반면에 너무 폭 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백과사전적 지식과 기초개념들에 치중되어 새로운 시대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새로운 시험은 3개의 필기와 하나의 구술시험으로 구성되는데, 필기시험에서 두 가지 형태(*prova di italiano & prova sulla disciplina caratterizzante del corso di studio*)는 교육부에서 직접 관장하지만, 세 번째 시험(*prova multidisciplinare sulle materie dell'ultimo anno*)은 시험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을 개별학교에서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술시험의 경우 중등과정의 상위 3년 과정 중 마지막 학년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치루도록 하였다. 성적의 총합은 여타 유럽국가과 같이 일반적으로 100점 단위로 하는데, 학교성적이 20점, 필기가 45점 그리고 구술시험이 35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격의 기준은 60점 이상이다. 시험위원회(*commissione d'esame*)는 최대 8명으로 받은 학교 내부의 교사들 받은 외부의 위원들 그리고 외부의 의장으로 이루어진다.

제 4 절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형평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위상문제는 이탈리아 공화국의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논의가 분분하였다. 좌파 정당들은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기민당은 가톨릭계가 대부분인 사립학교의 지원을 통해 형평성(*parità effettiva*)이 보장되게 함으로써 국가의 통제가 보다 원활할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앞서 공화국 시대의 교육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헌법 제33조 3항에서는 사립학교의 설립이 자유롭다고 보았지만 ‘국가에 부담을 과하는 일이 없이’라는 단서를 기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함시킴으로써 쟁점으로 남게 만들었다. 기민당은 1957년에 3항의 단서조건을 없애

려는 의도에서 헌법개정을 논하고자 하였지만 좌익의 반대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1964년에도 사립중학교에 대한 지원안이 다시금 제시되었으나 거의 모든 정파에 의해 부결되었다. 1986년에 들어와서야 사회당의 사무차장인 클라우디오 마르텔리(Claudio Martelli)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게 되는데, 그는 공립이건 사립이건 간에 학생들로 하여금 지불가능한 ‘학업권(buono di studio)’을 부여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내놓은바 있다.³⁵⁾

공·사립학교의 형평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실현가능해진 시기는 1997년 프로디정부의 교육부장관인 루이지 베르링게르가 4개조로 구성된 공·사립학교 평등법안을 제시하면서 부터였다.³⁶⁾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립학교의 입장에서 시(*comune*)차원의 수단과 규칙을 마련하지만 헌법에 기초한 공·사립학교의 형평성을 보장하게 된다.

사립학교의 개념도 ‘공립학교에 준하는 학교(*scuole pubbliche paritarie*)’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교육체계가 기본적으로 단일화되고 공립화(*le scuole private integrate nel sistema pubblico, cioè un sistema pubblico integrato*)한 것이다.

법안은 1980년대에 사회당의 마르텔리가 제안한 바와 같이 학교단위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기제로 운영된다. 즉 학교에 다니는 연령의 자제를 둔 가족에게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다. 또한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이를 중앙정부가 아닌 주(*regione*)정부 차원에서 관장한다. 평등법안은 가톨릭계 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

35) A. Semerato, *op. cit.*, p. 211.

36) 내각에 의해 승인된 공·사립학교의 형평에 대한 법안 4개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제공(*offerta di istruzione e formazione*); 직업교육 제공의 요건(*requisiti dell'offerta formativa*); 교육받을 권리(*diritto allo studio e incentivazione della scolarizzazione e della formazione*); 성인의 교육권리(*interventi per il diritto allo studio, l'istruzione e la formazione degli adulti*).

에 적용됨으로써 공화국 헌법 제33조 4항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³⁷⁾

제 5 절 대학의 자옉과 개혁

현대의 이탈리아 대학은 여타의 유럽국가들에 비해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나친 인문주의적 전통과 과학분야에 대한 상대적인 소홀은 일반적 관리자를 배출하는 기관으로 한정되었으며,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전공분야의 발전이 미흡하였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19세기까지의 대학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전문화된 분야의 개발을 위해 학위과정을 특화하여 여러 단계로 나누어 운영하였다.³⁸⁾ 그러나 이탈리아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여 몇몇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실패한 사례로 수용되고 있다. 부분적인 이유는 이탈리아가 통일 이후에도 높은 문맹률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화이트 칼라직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학졸업자의 사회적 지위는 전문화된 지식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사회 내에서는 상대적인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이다.

1960년대 말에 들어와서는 대학문호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학생수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질적인 변화를 동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학은 과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고, 졸업 후에도 적절한 취업을

37)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가족차원에서의 가톨릭 학교의 선택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가톨릭 학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바티칸은 호주에서 가톨릭 학교교사의 월급을 중앙정부가 50%, 지방정부가 25% 그리고 교회가 25%를 각각 책임지는 모델을 제시하면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제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38)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Education in France. 30 indicators on the education system*, Paris: DEP, 1996, p. 36.

할 수 없게 되자 졸업을 뒤로 미루면서 정상적인 학년 이후의 과정 (fuori corso)에 남는 학생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모든 대학이 국립의 형태로 운영되며 학생 일인당 정부의 보조금이 지불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대학생 수의 절대적인 증가는 정부재정부담의 증가와 연결되었다. 따라서 재정부담의 증가와 질적 교육이 실현될 수 없는 현실은 이탈리아 대학을 문젯거리로 만들게 되었고, 정치권과 정부는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비효율의 대명사로 전락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대학의 문제에 대하여 1960년대에 부분적인 논의와 개혁의 방안들이 마련되었지만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1980년대에 와서야 대학개혁이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에는 사회 전반적인 제도개혁의 흐름과 함께 대학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본격적인 발전도 이탈리아로 하여금 여타의 유럽국가와 보조를 맞추려는 차원에서 대학개혁을 외부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다.

20세기에 대학에 관한 정부법안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과시즘체제 하에 있던 1933년 8월 13일의 법률 1592는 대학교육의 목적과 대학당국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학습내용과 행정적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1938년 6월 4일의 법안 1269는 학생, 학위과정, 국가시험, 대학의 학업지원 등에 대한 규칙을 마련한 것이었다. 공화국 시대에 들어와 대학에 관한 의미있는 법률은 1980년 7월 11일에 와서야 제정되었다. 공화국 대통령령 382는 대학교수에 관한 규정, 단과대학위원회, 학과설치, 새로운 학위과정의 운영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³⁹⁾

39)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11 luglio 1980, n. 382, "Riordinamento della docenza universitaria, relativa fascia di formazione nonché sperimentazione organizzativa e didattica".

1989년 5월의 법률 168은 헌법 제9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가 과학 및 기술연구와 대학의 발전에 경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학 및 과학기술부(MURST)를 정부의 부처로 신설하였다.⁴⁰⁾ 이 부서는 정부 내의 부처 간 산업정책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며 교육부(MPI)와 공동보조를 맞추도록 요구되어졌다. 또한 대학 및 과학연구부는 상호연관기관인 전국대학협의회(Consiglio universitario nazionale)와 국립과학기술평의회(Consiglio nazionale delle scienze e della tecnologia)를 운영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탈리아는 1980년대 중반까지 기본적으로 단일학위제도(single degree system)를 유지하여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후 4년에서 6년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논문을 작성하면 라우레아(laurea)라는 학위를 수여하여왔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19세기까지는 이탈리아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만 해도 대학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 내에서 소수의 특권적인 계층에만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학문분야도 아직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지 않았았기 때문에 4년 내지 5년의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작성하면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20세기에 들어와 학위과정을 나누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분리함으로써 현대사회의 흐름에 보조를 맞춘 반면, 이탈리아는 최근까지도 19세기의 전통을 그대로 존속시켰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즉 과거의 소수 엘리트 위주의 대학문화에서 1960년대 이후에는 로마대학의 경우에만 학생수가 2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매머드화되면서도 질적 수월성의 추구는 요원하게 되었으며, 같은 라우레아졸업자의 경우에도 그 수준이 천차만별인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다.⁴¹⁾

40) Legge n. 168 del maggio 1989, "Istituzione del Ministero dell'Università e della Ricerca Scientifica e Tecnologica".

41)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탈리아의 라우레아를 석사학

이러한 상황은 학위제도의 다변화를 통한 대학교육의 재정비를 요구하게 되었고, 앞서 언급한 1980년의 대통령령 382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대통령령 382의 68항에서 80항까지가 박사학위과정(il dottorato di ricerca)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박사학위과정은 대학에서 라우레아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입학가능하며 시험을 거쳐 선발되고 매년 일정량의 장학금이 부여되는 연구과정으로 최소 3년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논문을 작성한 후 취득하는 학위이다. 박사학위과정의 시행초기에는 라우레아만을 취득하고 정식의 교수가 되기 위해 대학에서 경력을 쌓고 있던 연구원들(ricercatori)의 반발이 심하였으나 최근에는 20여년간의 시행을 거치면서 점차 제도적인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한 시행초기에는 기초분야의 연구에 치중하였으나 점점 응용연구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1990년 11월의 법률 341은 대학의 학위를 3등분하여 새롭게 정의하고, 대학체계를 개정하며 대학의 권한과 자율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갔다.⁴²⁾ 동법에 의해 이탈리아에서 대학의 학위는 공식적으로 4가지로 정의되고 있는데, 대학일반학위(diploma universitario, DU), 라우레아학위(diploma di laurea, DL), 전문학위(diploma di specializzazione, DS), 박사학위(dottorato di ricerca, DR)로 구분된다. 대학일반학위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내지 3년의 과정을 이수한 뒤 받는 학위로서 1차적인 대학학위의 위상을 갖는다. 특정 전문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졸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유럽통합의 차원에서 여타 유럽국가들의 1차 대학학위와 통용될 수 있는 가능

위에 준하는 학위(licenza)로 보는 듯하며, 박사학위는 수페르라우레아(superlaurea) 혹은 도또라또(dottorato)라고 명명하면서 미국식의 Ph. D.를 의식하는 학위론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그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탈리아 라우레아의 독특한 전통을 유지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움베르토 에코(김운찬 역), □□논문 작성법 강의□□, 열린책들, 1994, 서문참조.

42) Legge 19 Novembre 1990, n. 341, "Riforma degli ordinamenti didattici universitari".

성을 열어 놓았다. 대학일반학위를 수여한 뒤 라우레아 과정에 진학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전공별로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라우레아학위는 4년에서 6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대학수준에서 문화적, 과학적, 전문직업적 지식과 방법론을 이수시키는 과정이다. 법률 341에서 특이할 점은 라우레아학위(DL)가 유치원과 초등학교교사가 되는 시험을 치루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학위라고 밝힌 점이며,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라우레아학위뿐 아니라 최소 2년 과정의 전문학위(DS)를 취득하여야 기본 자격을 준다는 사실이다.⁴³⁾ 이로써 전통적인 라우레아학위는 사실상 과거에 비해 공식적으로 평가절하되었으며 박사학위와의 차별성을 확실히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라우레아과정에서 과거에 1년 단위의 학기제로 운영하며 4년 과정의 경우 20과목의 시험을 통과하면 졸업이 가능하던 체제에서 탈피하여, 개혁안에서는 240학점의 개념(punti oppure crediti al posto dei voti)을 도입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추구하고 있다.⁴⁴⁾ 아울러 라우레아과정의 초기 2년간을 일종의 방향제시과정⁴⁵⁾으로 설정하여, 그 이후에 대학일반학위만을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라우레아과정을 모두 이수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초기 2년 과정에서는 전공학부의 최종적인 선택도 3년차에서 결정하도록 만듦으로써 학생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43)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n. 370 del 31 luglio 1996, "Scuola di Specializzazione per la formazione degli insegnanti di Scuola Secondaria".

44) 4년제 라우레아의 경우 1년에 60학점, 한 학기에는 30학점을 취득하여 8학기 동안 240학점을 얻어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대학일반학위의 경우 120학점 그리고 6년제의 의과대학의 경우 360학점을 이수하도록 정하였다.; G. Martinotti(a cura di), "Autonomia didattica e innovazione dei corsi di studio di livello universitario e post-universitario", in MURST, *Rapporto finale sull'autonomia didattica*, Roma, 1997.

45) 초기 2년간의 방향제시과정(il primo biennio universitario)을 수학하면 대학기초증명서(certificato universitario di base, Cub)을 발급한다. 방향제시과정은 여러 학부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여 학부이기주의를 지양하고 학제간 연구나 새로운 협동강의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박사학위(DR)의 경우 시행초기에는 학위증을 교육부장관의 직위명으로 수여하던 방식에서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총장이름으로 발급하게 하였다.⁴⁶⁾ 또한 졸업시험위원회의 구성도 과거에는 교육부와 전국대학협의회에서 주관하였지만 변경된 규칙에서는 해당대학의 총장 주도로 치루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5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최소한 1명 이상의 타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위논문의 작성도 이탈리아어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국박사과정학생협의회(ADI)의 입장을 보면, 학위과정 이수자들이 부당하게 강의에 동원되고 있으며, 강의 시에도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여 강의를 금지하거나, 만일 강의할 경우 그에 상응한 보수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학의 자율문제도 교육개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과제이다. 자율성(l'autonomia scolastica)은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의 운영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1997년 바사니니(Bassanini)장관의 연방주의에 기초한 행정개혁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됨으로써 본격화되고 있다.⁴⁷⁾ 바사니니법안 제21조에서는 학교의 자율을 천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초·중등학교의 경우 교장이 완전한 운영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는 것과 학교의 운영을 국가의 차원보다는 지방과 지역의 차원에서 조직하고 시행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1989년의 법률 168의 제6조에서 대학의 전반적인 자율문제, 제7조에서 대학의 재정적 자율, 그리고 제8조에서 국가연구기관의 자율성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전반적인 자율성(autonomia

46)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n. 387 del 3 ottobre 1997, "Regolamento recante disciplina delle procedure per il conseguimento del titolo di dottore di ricerca".

47) Legge 15 marzo 1997, n. 59, "Delega al Governo per il conferimento di funzioni e compiti alle regioni ed enti locali, per la riforma della Pubblica Amministrazione e per la semplificazione amministrativa".

delle università)은 대학이 법인체이며, 연구와 행정의 완전한 자유를 지니고, 대학의 학칙에 의해 모든 것이 조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 수업의 자율성(*autonomia didattica*)은 1990년 법률 341의 제11조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재정적 자율(*autonomia finanziaria e contabile delle università*)문제에 관해서는 대학의 수입이 국가의 보조, 학생의 부분적인 등록금 및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다고 본다.⁴⁸⁾ 국가의 보조(*trasferimenti dello Stato*)는 교직원의 급여, 대학의 건축물을 포함한 다양한 비용 그리고 과학적 연구기금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국가연구기관의 자율성은 국가연구평의회(*Centro nazionale delle ricerche, CNR*), 국립핵물리학연구소(*Istituto nazionale di fisica nucleare, INFN*), 천문기상대들(*gli Osservatori astronomici, astrofisici e vesuviano*)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각각 국가의 지원을 받되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라는 정신을 천명하고 있다. 최근 대학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대학평가의 역할, 대학체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 대학 간의 차별화를 위한 지수의 개발 등이다.

제 6 절 개혁의 성과

루이지 베르링게르 교육부장관의 교육개혁은 1923년 발표된 쵸반니 젠틸레의 개혁안 이후 교육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본적인 출발점은 이탈리아의 교육제도가 여타의 유럽국가들이 이미 달성해 놓은 교육개혁을 이룩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에 비롯된 것이다. 특히 교육과 직업형성과정의 불일치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유치원교육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탈중양화, 자율, 탈관료제화, 유연화 등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서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48) ISTAT, *op. cit.*, pp. 185-6.

이러한 차원에서 1990년대에 진행된 교육개혁은 그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 준비도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일부에서는 개혁안에 대하여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극좌파의 학생들은 자율개혁안이 대학을 지나치게 기업화할 것으로 염려하는 반면, 전국경영자총연합회(Confindustria)측은 개혁의 내용이 기업과의 구조적인 관계를 적절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는 반론을 제시한 바 있다.⁴⁹⁾ 중도좌파 정부의 교육개혁은 그러나 2001년에 들어선 우파 정부에 의해 상당한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49) 전국경영자총연합회의 교육에 대한 기본전략은 다음과 같다: 대학과 기업의 연결 고리 강화; 교육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기업의 입장을 교육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 발전적인 위상정립을 위한 상호 의사소통의 공통언어 개발.

제 4 장 2003년 모라티 개혁

2001년 총선을 통해 구성된 베를루스코니(Berlusconi) 정부는 우파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선거전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연금 지급 수준의 상향 조정 등을 내세우며,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내세웠다.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레티지아 모라티(Letizia Moratti)는 밀라노의 기업인 출신이었으며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탈리아 경제의 건전화와 자유화 그리고 이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취지하에 교육정책을 이끌어갔다. 또한 교육재정의 분권화를 추구하여 직업교육을 주에 맡기며 공립학교의 예산의 감축하는 등 좌파로부터 반개혁적 조치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⁵⁰⁾

모라티 개혁은 이탈리아 학교제도에 대한 개정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3월 28일 상하 양원을 통과한 교육개혁법 53은 동법의 발효시기로부터 24개월 이내에 후속 법률을 제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총 7개조로 구성되는데, 1조는 서문, 2조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제도, 3조 일반학교 및 직업교육제도에 대한 평가, 4조 학교와 노동의 대체성, 5조 교사양성, 6조 특별주 및 자치현으로서 트렌토와 불자노 지역에 대한 조치, 7조 경과조치 등이다.⁵¹⁾

개혁법은 90일 안에 교육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내각에서 통과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모두에서 적어도 12년의 수학연한이 만 18세까지 권리로서 보장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중도좌파 정부의 개혁안 이전으로 돌아가 각각 5년(1+2+2) 및 3년(2+1) 과정으로 운영되며, 고등학교는 15세에 입학

50) Riforma della scuola, Dalla riforma Berlinguer alla riforma Moratti.(<http://www.gildains.it/riforma/riforma.htm>에서 2007년 6월 30일 검색).

51) Legge 28 marzo 2003, n. 53, Delega al Governo per la definizione delle norme generali sull'istruzione e dei livelli essenziali delle prestazioni in materia di istruzione e formazione professionale, pubblicata nella Gazzetta Ufficiale, n. 77 del 2 Aprile 2003.

하여 5년 과정(2+2+1)을 이수하고 국가시험(esame di maturità)을 치르도록 되어있다.⁵²⁾ 고등학교(liceo) 제도 내에서는 서로 전학이 가능하나, 직업·기술계 학교와의 호환은 금지하고 있다. 즉 인문, 외국어, 과학, 사범 등의 고교생들은 필요시 서로 이동할 수 있으나, 직업학교 학생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게 되었다.

모라티 개혁이 일반 사회에 준 파장은 막대한 것이었는데, 전국의 대학에서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주된 내용은 대학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1980년 대통령령으로 도입된 대학 연구원(ricercatore)제도를 개정하는 것이었다.⁵³⁾ 그간 대학의 연구원은 미국대학제도에서 조교수에 해당되는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이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영구직(tenure position)을 부여함으로써 재정적 측면에서 부담이 되어왔으며, 이들에 대한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였다. 새로운 개혁안은 이들 영구직 연구원제도를 혁파하여 일정 기간 계약제로 채용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재임용을 하면서 해당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과거에는 연구원 임용이 개별 대학의 심사로 결정되었는데, 새로운 제도를 통해 종신직 연구원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발절차를 거치도록 변경하였다. 다만 이행기의 갈등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2013년부터 실시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모라티 개혁은 대학의 교수직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었는데, 이탈리아 대학의 교수는 두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교수(professore ordinario di prima fascia)는 최고의 명예직이며 최장 7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이고, 부교수(professore associato di seconda fascia) 역시 정년을 보장받는 위치에 있다. 비록 이탈리아 대학교수의 급여수준이

52) La riforma Moratti, ultima versione, Analisi dei contenuti della riforma e degli emendamenti al testo introdotti dal Senato. Di Danilo Molinari. Gennaio 2003.

(<http://isole.ecn.org/reds/scuola/scuola0301riforma.html>에서 2007년 6월 30일 검색).

53) D.P.R. 11 luglio 1980, n. 382. "Riordinamento della docenza universitaria, relativa fascia di formazione nonché sperimentazione organizzativa e didattica."

독일과 같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낮은 강의시수, 신설강좌 개설의 자유 및 신분보장의 측면에서 이탈리아의 대학교수는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낮은 사회계층의 사람들에게 진입이 어려운 직업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교수의 충원에서 정실이 개입되며, 대학의 운영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어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이탈리아를 떠나 미국이나 여타의 선진국에 소재한 대학이나 연구소로 유출되는 현상(brain drain)이 고착화되었다. 모랏티 개혁안에서 대학교수의 강의시수를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려고 했는데 기존 교수진의 반발이 극심하게 표출되었다.

본 장에서는 베를링게르 개혁안과 모랏티 개혁을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⁵⁴⁾

제 1 절 교육제도의 목표와 성격

양 개혁안 모두에서 일반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명시함으로써 단일 교육체제 내에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제도의 목표에서는 공히 인간의 성장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성장시기에 맞추어 그리고 개인의 차이와 정체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 가족에게는 더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학교는 제도의 개념에서 서비스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전환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많은 참여와 의견개진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한 의무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학교의 성격과 관련하여, 좌파정부의 베를링게르 개혁은 의무교육의 측면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우파정부인 모랏티 개혁에서는 교육연한 12년 또는 18세까지 교육받을 권리의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다.

54) Centro Studi Gilda, RIFORME A CONFRONTO. QUEI “10 PUNTI” CHE FANNO LA DIFFERENZA...O L'ANALOGIA. (<http://www.gildacentrostudi.it/1documentiaconfronto.htm>에서 2007년 6월 30일 검색).

제 2 절 취학연한과 수학기간 및 졸업연령

선택의 영역인 고등학교 과정을 차치하고 베를링게르 개혁은 만 6세에 취학하여 만 18세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라티 법은 6세 이전에도 취학이 가능하며, 취학연령이나 교육기간에 따라 18세 또는 19세에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좌과정부에서는 12년간의 수학기간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 우과정부의 개혁안에서는 일반학교인 경우 13년 그리고 직업학교에서는 12년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직업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도 상급기술대학이나 일반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1년의 교육과정을 밟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모라티 개혁에서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차별하면서 수학연한에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제 3 절 교육제도의 근간

베를링게르 개혁에서 학교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다. 초등과정(Scuola di base unica)은 7년간 지속되며, 중등과정은 고등학교로 명명되면서 5년간 수학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첫 두해와 나머지 3년 과정을 구분하고 있다. 이 개혁에서 의무교육은 15세까지 보장되며, 고등학교 과정의 첫 두해 기간이 포함된다. 만일 고등학교에서 더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 18세까지 직업학교에서 수학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1999년 5월 17일 법 144호). 이 기간 동안의 직업교육은 일반학교 교육과 병행될 수 있으며, 현장에서의 인턴근무도 필수화하였다.

모라티 개혁에서는 5세에서 6세 그리고 18세에서 19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반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체계는 두 주기로 나뉘게 되는데, 첫 주기(un primo ciclo)는 5년 과정의 초등학교와 3년 과정의 중학교로 구성되어 있다(5+3제).

두 번째 주기(un secondo ciclo)는 5년 과정의 일반고등학교와 직업훈련학교(4+1제)로 구분된다.

두 개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베를링게르 안은 기본적으로 수학연한에서 중등과정 초기의 2년을 포함하여 15세까지 교육을 받는 단일제도이다. 여기서 중등과정의 초기 2년은 일반학교교육을 마치는 기간인 동시에 상위 과정을 준비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단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나 직업학교 상호간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평적 체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모라티 안은 단일과정으로서 기초교육은 14세에 마치게 되며 제1기 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그 이후의 과정은 두 갈래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반학교와 직업훈련교육의 길을 걷게 된다. 단 직업트랙을 밟은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일반학교로의 전학이나 대학 진학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베를링게르 교육개혁은 기본 철학으로 권리의 평등에 기초하여 기회의 균등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주의적 교육관은 노동문화를 저평가하며 교육과정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즉 필연적으로 교육체계 전체의 평준화를 야기하게 되어 사회의 엘리트층으로 하여금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

모라티 교육개혁의 경우 이전 시스템에 비해 보다 균형적이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측면에서도 우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초등교육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주정부가 책임지게 함으로써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였으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즉 기초교육을 주정부의 권한 하에 두는 것은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특화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국가적 일치 내지 국민통합을 위한 균형잡힌 교육이 훼손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각급 학교간의 전학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사의 수평적·수직적 이동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제 4 절 교육의 지속성

두 개혁안 모두에서 교육의 지속성이 내포되고 있다. 베를링게르 개혁은 유치원 교육이 유아시기를 위한 교육이라는 점과 초등과정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초등과정은 유치원교육과 중등과정을 연계하여 교육 전반을 단일한 과정으로 성격 지우고 있다.

모라티 법에서도 제1기 교육(초등과정)이 유치원 교육과 제2기 교육(고등과정)을 연결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일반고등학교와 직업교육학교의 교육이 대학이나 상급기술대학으로 진학하는데 필요한 교과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제2기 교육의 마지막 해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쌓아나가는 기간으로 정하였다. 모라티 교육개혁에서 과거의 단계(stadio) 개념을 폐지하고 기(ciclo) 개념을 도입한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며 개별 과정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과거의 교육이 매 과정마다 같은 내용을 이수시키되 그 수준을 차별화하여, 교육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작용에서 우파정부의 개혁안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절 교육의 선별성

두 교육개혁이 실시되기 이전의 이탈리아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3단계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두 정부의 개혁안은 모두 2단계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좌파정부에서는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을 포함하는 기초학교와 고등학교, 우파정부에서는 제1기 교육과 제2기 교육. 좌파정부의 교육개혁에서는 7년 과정의 기초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2년을 수료한 시점에서 중간수료증을 발급하면서 의무

교육 연한인 9년을 마치는 것으로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렇다면 두 제도에서 시험을 통한 졸업자격을 주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선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졸업시험에서 낙방한 학생에게 교육제도로부터 축출하는 선별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이는 여러 정당들이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하면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생존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지식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도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베를링게르 개혁은 선별 개념 자체를 극복하려 하였으며, 교육과정이 개인의 재능과 천성 그리고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즉 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생이 적성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며 자질을 개발하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의 대상인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성공적인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모라티 법은 선별지향적 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인의 다양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구하였다. 즉 일반고등학교와 직업학교의 교육내용을 다채롭게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개별 교육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봉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별 논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과거의 제도와 차별적이다.

베를링게르의 교육제도는 학점으로 모듈화된 개인적 교과과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식에 가까운데, 즉 모든 학생은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에서는 성적이 열악하거나 재능이 부족하여 탈락하거나 주변화하는 현상을 배격하고 있다. 반면에 모라티 교육제도는 학습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벌칙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조치는 일련의 교육과정⁵⁵⁾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상급과정에 진학하는 논리와 충

55) 제1기는 1+2+2+2+1제이며, 제2기의 일반고등학교는 2+2+1제인 반면에 직업학교

돌릴 수 있다. 또한 별칙과 개별 학교 내부에서 주관하는 고등학교 국가졸업시험(Esame di Stato finale)이 홀대를 받는 현상은 서로 모순적이라 판단된다. 사실 베를링게로 시대에 시행되었던 국가시험은 상징적이었다고는 하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일관성과 단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새로 도입된 제도에서는 학교의 외부에서 파견되는 자가 의장을 맡는 방식으로 졸업시험 출제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지역 간 편차와 개성이 존중되는 상황이라면 공립학교 간 그리고 공사립학교 간 경쟁과 갈등이 예상될 수 있다. 실제로 밀라노의 유명 사립대학인 보코니(Universtia Commerciale di Luigi Bocconi)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시험 성적을 입학 전형시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천명한 바 있다.

제 6 절 분절된 제도

이상의 논의를 통해 두 개혁안 모두는 교육의 지속성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여러 다른 수준의 교육이 야기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점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다. 중등과정으로 불리는 베를링게르 개혁과 제2기로 일컬어지는 모라티 제도 모두 개별 과정 내부를 세분화시키고 있다. 즉 교육연한을 수개로 나누어 학점제로 전환하였으며 일정 학점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 상급학년으로 올려 보내고 있다. 이러한 수직적 비연속성은 기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수평적으로는 서로 연속적이며 대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일정 학교에서 타학교로의 전학이나 이동에서 규정 학점을 이수한 경우 별 다른 제지를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간은 물론이고 직업학교로의 이동에서도 적용된다.

는 3+1+1제로 운영되고 있다. 각 기 내부에서의 상급학년으로의 진급은 자동적이므로, 모라티 개혁이 보다 선별적인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에 비해 오히려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라티 교육법 제2조 1항은 베를링게르 교육개혁법 제4조의 내용을 거의 답습하고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 간의 전학은 자유로우며 보장되며, 직업학교로의 이동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2기 어느 학교에서라도 이수된 학점은 타 학교로의 전학시 보장되며, 개인적 사유로 인해 공부를 중단하고 다시 복학하는 경우에도 전적으로 과거의 이수학점이 존중된다.” 지속성과 교육제도를 기로 구분하는 제도와는 다른 이유는 설명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부합되는 교육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발생시키게 된다: 학교와 해당 지역공동체의 유기적 관계설정, 교육제도와 과정의 복합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효율성 제고, 점진적으로 국가의 균형예산을 위한 국가중심의 교육 탈피.

제 7 절 탈중심적 제도

두 교육개혁 모두는 탈중심적 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베를링게르 교육제도는 한 시간당 1년 수업이 33주 동안 30시간을 이수하는데, 개별 학교는 20%에서 40%까지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40%의 경우 고등학교 3년 과정에서 실시된다. 모라티 제도에서는 학업계획에서 국가의 정체성과 전통 그리고 문화를 반영하는 국가적 기초의 과정과 지방의 현실과 이해를 반영하는 주차원의 할당부분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바사니니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반면, 후자에서는 주 중심의 교과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주정부 그리고 심지어 학교로의 탈중심화는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일부의 사례에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제 8 절 관료제적 제도

두 정부의 교육개혁은 각급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한 바사니니 법(1997년 3월 15일 법 59)의 승인과 더불어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학교와 연관된 행정차원의 탈중심화의 목표 중에 하나는 중앙정부의 긴장을 완화하고 관료제의 거대화를 해소하려는데 있었다.

양 교육개혁안을 살펴보면 모든 교육과정이 종료되거나 상급과정으로의 진급시 학점화된 증명서를 발부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탈중심화된 학교상황에 대한 조치로 전국교육제도 평가연구소(Istituto Nazionale per la Valutazione del Sistema)를 설치하여 통제하는 기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양 제도 모두에서 필연적으로 관료제의 실천이 증가하게 되었다. 즉 주정부로 이관되는 교육자치가 실시되면서 영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관료제적 통제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교육의 질이나 전문성의 성격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제 5 장 교육제도의 유럽화 : Bologna Process를 중심으로

제 1 절 배 경

1988년 유럽 최초의 종합대학인 볼로냐대학이 900주년을 맞이하여 유럽 주요대학의 총장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대학교육의 유럽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유럽대학의 총장들은 유럽대학 대헌장(Magna Carta Universitatum)을 채택한바 있다. 그리고 1998년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의 교육부장관들은 파리에서 소르본선언(Sorbonne Declaration)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이어 이듬해인 1999년 6월 역사적인 볼로냐 선언(Bologna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유럽 29개국 교육부장관들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유럽문화협약(European Cultural Convention)에 포함된 국가들에게 가입이 허용되었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이상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선언이 이행되는 과정을 지칭한다. 이 프로세스의 궁극적 목표는 범유럽화된 고등교육 시스템의 구축이며, 이것은 일시적으로 완결될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주된 정책목표의 달성연도를 2010년으로 잡았다. 볼로냐 선언은 다음과 같은 주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이해하기 용이하고 상호 비교 가능한 공통된 학위구조 및 학위보조자료 제도의 도입;
- 기본적으로 학부·대학원 수준 혹은 학·석사의 2개의 사이클에 기초한 시스템의 도입하며, 최초 학위는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노동시장의 요구에 합치되도록 설계함;

- 범유럽 학점 교환 계획(ECTS: European Credit Transfer Scheme)에 합치되는 학점체계의 구축(평생학습 활동 포함);
- 교육의 질 보장(quality assurance)에 있어서 범유럽 차원의 공통된 기준과 방법의 개발;
- 학생, 교사, 연구자 및 행정직원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장애요인 제거.

제 2 절 전개과정

1. 베를린 회의(2003)⁵⁶⁾

볼로냐 선언이후 관련 당사국의 대표들은 매 2년마다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전시키고 있다. 2001년 체코 프라하에서 논의가 진전되었으며, 2003년 9월 18일 ~ 19일 베를린 교육부장관 회의에서는 볼로냐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차원의 중요성을 재천명하면서, 유럽 고등교육체계의 경쟁력 증진의 필요성은 통합유럽 고등교육 체계의 사회통합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목적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교육부장관들은 프라하 회의 이후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서 만족감을 표명하면서 추후 2년 동안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투여할 중기적 차원의 우선사업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 교육의 질 보장

단위기관의 자율성 원칙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주된 책임이 단위기관 자체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교육부장관들은 이를

56) Realising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Communiqué of the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Higher Education in Berlin on 19 September 2003 (<http://www.bologna-berlin2003.de/pdf/Communique1.pdf>에서 2007년 10월 25일 검색).

위해 2005년까지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책무의 정의 ; 내부 평가 및 외부 기관에 의한 평가, 학생들의 참여 및 결과의 출판 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또는 기관의 평가; 평가 인증(Accreditation), 자격 인증(Certification) 또는 그에 상당한 절차에 관한 시스템; 국제적 참여, 협력 및 네트워킹.

- 학·석사의 2개 사이클 체제

이 체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교육부 장관들은 범유럽 고등교육체제의 구축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각국의 자격 체제를 자국 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범유럽 차원에서 볼로냐 프로세스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해 나가는데 노력하기도 했다. 자격 체제는 각 자격들을 업무량(workload), 수준(level), 요구되는 학습수준(learning outcomes), 요구되는 자질(competences), 그리고 자격 명세(profile)의 견지에서 기술하도록 했다.

- 학위와 수학기간의 인정

리스본 자격인증협약(Lisbon Recognition Conven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빠른 시기 내에 볼로냐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이를 비준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상의 세 가지 우선순위 사업 외에도 통합유럽 고등교육지대(EHEA: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구축과 지식 기반 유럽을 위한 유럽 연구지대(RAEC, Research Area in a Europe of Knowledge) 사이에 밀접한 연계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베를린 회의에서는 앞서 언급된 학·석사의 두 가지 사이클 이외에 박사 수준을 볼로냐 프로세스의 3번째 사이클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를 박사 및 박사 후 수준 연구자들의 이동성의 증진, 박사과정의 고등교육기관들과 신진 연구자들 간의 협력증대 및 연계를 주문하였다. 1999년 볼로냐

선언 당시의 참여국이 29개였던 것이 비해 베를린 회의에서는 40개국으로 회원수가 증가하였다.

2. 베르겐 회의(2005)⁵⁷⁾

2005년 5월 19일~20일 양일간 노르웨이의 베르겐에서 유럽 45개국의 교육부장관들이 모여 회합을 가졌다.⁵⁸⁾ 그간에 진행된 논의를 기초로 하여 2010년까지 유럽고등교육지대를 구축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특히 대학학위의 세 가지 기(cycle)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채택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 1기 : 180에서 240 ECTS(범유럽 학점 교환 계획)를 취득하며 학사 학위를 수여;
- 2기 : 90에서 120 ECTS를 이수하며 석사학위 수여;
- 3기 : 박사학위를 수여하며 학점 이수 의무기준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 학사학위는 3년, 석사학위는 2년 그리고 박사학위는 3년과정으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학위명은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학위제도는 기존의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제도와 유사하며 유럽의 대륙국가들이 유지하여온 제도와는 차별적이다.

57)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 Achieving the Goals, Communiqué of the Conference of Europ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Higher Education, Bergen, 19-20 May 2005 (<http://www.sou-lj.si/mp/docs/Bergen-communicue-en.pdf>에서 2007년 10월 20일 검색).

58) 베르겐 회의에서 신규 가입한 국가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이다.

3. 런던 회의(2007)⁵⁹⁾

런던 교육 및 대학관련 장관회의에서는 몬테네그로를 신규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4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베르겐회의에서 채택된 내용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을 검토하면서 유럽고등교육지대에 대한 보다 확고한 지지를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볼로냐 프로세스의 핵심요소라 볼 수 있는 교원과 학생의 이동성을 제고하고, 대학학위를 3기로 구분하여 제도화하며, 유럽국가간 상호 학위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특정 학위과정의 이수내용을 표준화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생애주기의 이른 시기부터 평생교육을 접목시키며, 유럽고등교육지대와 유럽연합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럽연구지대(European Research Area)가 밀접하게 연관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런던회의에서는 유럽고등교육지대가 더 넓은 영역에서 통용되도록 하기 위해 세계화적 맥락에서 타 대륙과의 교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네스코와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향후 이년간 추진해야할 우선 정책으로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교원과 학생의 국제교류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응집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형편으로 대학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 상기의 작업과 노력이 자료화되어 유럽통계청을 통해 비교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일, 3개의 학위과정을 마치는 경우 고용과의 연계성 검토, 학생친화적 그리고 결과 중심적 평가체제 마련 등이 개선되었다.

59) Towards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responding to challenges in a globalised world London Communiqué, 18 May 2007 (<http://www.dfes.gov.uk/londonbologna/uploads/documents/LC18May07.pdf>에서 2007년 10월 24일 검색).

4. 유럽연구대학연맹

유럽연구대학연맹(League of European Research Universities, LERU)는 박사과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차원에서 2007년 5월 ‘유럽의 박사과정(Doctoral Studies in Europe: Excellence in Researcher Training)’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⁶⁰⁾ 유럽에서 지식 경제(knowledge economy)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견고한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원들의 양성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인력 양성은 앞으로 유럽의 연구 개발 정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는 내용이다.

최첨단 연구는 지식에 기반한 사회에서 혁신의 근원이 되며, 유럽의 경제, 정치, 문화 생활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고도로 훈련된 연구원들, 특히 박사학위와 그에 준하는 고급 학위 소지자들은, 창조성, 혁신, 지식의 이양과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주역들이다.

대학연맹은 연구를 부추기고 그에 따른 지식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유럽에서의 박사 양성이 무엇보다도 우수성(excellence)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사 후보들의 평가와 선발이 엄격해야 하고, 이들이 풍요로운 연구 환경 속에서 작업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적으로도 잘 지원되어야 할 것은 물론 강력한 제도적인 관리 및 지휘를 요구한다.

이러한 우수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럽의 박사과정 프로그램들이 일관성 없이 분열되어있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오늘날 유럽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은 천 개가 넘는다. 반면에 미국은 400여 개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100여 대학에서 총 박사 학위의 80%가 수여된다.

60) LERU, Doctoral Studies in Europe: Excellence in Researcher Training, (<http://www.leru.org/?cGFnZT00>에서 2007년 10월 15일 검색.)

대학연맹은 이러한 분열 때문에 에너지와 재원이 분산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연구와 훈련이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목표 설정이 뚜렷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대학연맹은 특별히 대학들 간의 협력과 박사 프로그램에서의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했다. 이는 볼로냐 프로세스에서도 강조된 바이다. 즉, 1999년 6월 유럽 30개국의 교육부 장관들이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대학 교육 제도의 개편과 통합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의 주요 골자는 2010년까지 유럽 단일의 대학제도를 설립하여 유럽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장관들은 볼로냐 선언을 통해서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유럽 모든 나라들의 대학에서 제 1기 (학사) 과정의 학위와 제 2기 (석사) 과정 학위를 도입한다 (1기의 기간은 최소한 3년으로 한다). 둘째, 유럽 학점 인정 시스템 (ECTS, 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의 도입, 셋째, 학생들과 교수들의 이동성에 대한 장애 제거 등이 그것이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에 의해 규약 개정이 요구됐지만, 각 대학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대학의 제도 개혁을 위한 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인 조건으로 강조된다. 통합된 유럽 대학의 실현을 위해서는 유럽의 대학간 네트워크 구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회의에서 유럽의 고등 교육부 장관들은 박사 프로그램이 유럽의 전략과 정책 속에 통합되어야 하며, 박사 후보들 및 초보 연구원들에게 역량과 기대에 부응하는 앞날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유럽연구대학연맹은 장관들의 성명이 담고 있는 주요 노선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박사 과정에 대해서 상부로부터 규제 틀의 부과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

명이다. 특별히 박사과정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 시스템을 피해야 할 것이며, 연구 분야 결정이나 기간, 입학허가 기준 등은 대학들에 의해서 채택되어야 할 것이라고 확인한다.

박사과정에 대해서 관료주의적인 측면을 지양하고, 대학의 프로젝트 개발, 전략 수립, 박사 프로그램 구성 등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특별히 대학의 자율성 문제는 자주 거론되고 있다. 지난 4월 유럽대학연맹의 Wilson 사무총장도 "자율성의 증대만이 유럽 시스템의 분열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서 대학들은 다양화(diversification)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연맹은 대학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되, 연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과 기관들에 대해서 정부는 규칙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박사과정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구대학연맹의 유럽연구지대의 미래(The Future of the European research area)라는 8월의 보고서에서도 수월성이 높은 연구가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위해 그리고 건전한 세계화를 위해 유럽연합의 회원국에게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였다.⁶¹⁾ 비록 각국마다 연구의 기초와 성격이 차별적이지만 대학연맹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녹서 발행을 통한 유럽연구지대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함으로써 유럽사회의 발전을 위해 역동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작업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⁶²⁾

그러나 유럽연구지대에 대한 보다 분명한 동기에 필요한데, 단순히 유럽차원에서 새로운 권위체를 만드는 정치적 계획이어서는 안되며 유럽의 연구를 진작시키며 그로 인한 부수적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대학연맹은 연구의 이동성, 공동기획, 고가의 인프라와 시설에 대한 조달과 관리, 과학 분야에 대한 공적인 개입 그리고 공동의 비용대비 효과적인 특허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규범적 선

61) Ibidem

62)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Research Area: New Perspectives, COM(2007) 161.

언이 유럽차원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구체화하여야 하며 유럽차원에서 중앙화된 조정장치와 연구의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 3 절 이탈리아 대학교육의 유럽화

볼로냐 프로세스는 대학교육과 연구에 대한 공적 책임, 대학교육의 거버넌스, 대학교육과 연구의 사회적 차원, 세계화되고 더욱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육의 가치와 역할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개혁이다.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연합이 주도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의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를 포함하는 정부간협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법규와 같은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볼로냐 선언은 조약이나 협약이 아닌 관계로 서명 국가의 입장에서 법적인 강제가 행사될 수 없다. 이 프로세스에 대한 참가와 협조는 어디까지나 가입국가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교육의 영역이 민족국가의 주권의 영역이므로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유럽연합의 기제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의회나 개별 국가의 의회의 참여가 제한되어 민주적 측면에서 일정 정도 한계를 갖고 있다.

볼로냐 선언이 유럽연합의 제도권 밖에서 이행되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대학의 학위제도를 획일적으로 수립하기보다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으로 이분화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과거 유럽대륙의 대학들은 5년 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에 해당되는 첫 학위를 수여하여 왔는데, 일부는 졸업을 늦추면서 수학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아예 졸업을 하지 못하던 사례도 많았다. 이들 국가들 대부분은 최근 볼로냐 프로세스가 채택되면서 기존의 과정을 이분하여 학사학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탈리

아의 경우 1999년도에 3+2 학위제도의 도입하는 개혁에 따라 볼로냐 프로세스의 체제에 부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첫 번째 학위는 3년 과정의 라우레아(Laurea)이며, 이를 마치고 2년의 전문과정을 수학하게 되면 마지스터 라우레아(Laurea Magistrale) 학위를 수여하게 된다. 마지스터 라우레아는 영미식의 석사학위(Master's Degree)와 일치하며, 3기과정인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탈리아의 새로운 학위제도에서는 다양한 마스터(Master)가 존재하는데, 이를 석사학위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마스터 과정은 2기 과정의 하나로서 이를 마친다고 해서 박사과정에 입학이 허가되지 않는다. 초급수준의 마스터 과정은 3년의 라우레아 과정을 마친 자에게 입학이 허가되며, 고급수준의 마스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스터 라우레아가 요구된다. 이탈리아 대학에서는 새로운 학위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공과정에서 과거식의 단일 학위제를 고수하고 있다. 가령 의대의 경우 6년의 단일과정으로 운영되며, 약학, 수의학, 건축학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법학이 5년제로 이수된다.

박사학위는 연구박사(dottorato di ricerca, research doctorate)과정이며 통상적으로 3년에서 4년의 수학기간을 요구하고, 학점의 이수는 의무가 아니나, 다양한 세미나에 참석해야 하며 논문 작성이 박사학위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탈리아의 박사학위는 1983년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내국인의 경우 장학금이 주어진다.

전체적으로 보아 볼로냐 프로세스의 취지는 이탈리아의 대학개혁을 통해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탈리아는 1980년대 이전 대학의 학위가 단일학위제로 운영되면서 유럽의 타 국가와 비교하기 어려운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수차례의 개정 작업을 통해 초중등 교육을 13년간 이수하고 라우레아 3년, 마지스터 라우레아 2년 그리고 박사과정 3년 내지 4년으로 구성되어 미국식 학위제도의 연한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학기제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1년을 단일 학기로 운영하여 한 과목당 이수내용의 폭과 깊이가 넓고 깊어서 여러 문제점을 보여왔는데, 이탈리아 대학교육의 유럽화를 통해, 한국과 같은 2개 학기제로 운영되며 유럽학점제도의 도입으로 표준화된 이수과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제 6 장 현행 교육제도

19세기 말 이탈리아의 통일 이후 교육제도는 몇 차례의 변천을 경험하였다. 통일 이탈리아의 기본 교육제도는 1859년의 카사티법을 근간으로 했는데, 초등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문맹률을 낮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카사티법에서 초등학교는 자치시가 중등교육은 주정부 그리고 대학교육을 중앙정부가 관장하였다. 1923년 파시즘 체제에 개정된 젠틸레법은 교육의 중앙집권이 강화된 형태였으며 인문주의적 교육철학에 기초한 교과과정이 마련되었다. 의무교육이 14세까지 확장되었으나 초등과정 5년을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업교육(avviamento al lavoro)을 받는 이중구조가 고착되었다.

공화국시대에 들어와 1962년 14세까지의 의무교육에서 직업교육이 폐지되면서 초등학교 5년과 중학교 3년으로 이어지는 단일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1962년 이후 이탈리아의 초중등교육제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 Berlinguer법에 의해 기술계고등학교와 직업학교가 신설되었다.

이탈리아의 대학제도는 1999년 교육부령 509/99에 의해 5년 과정의 단일학위를 부여하던 구제도에서 볼로냐 프로세스의 지침에 충실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즉 기존의 라우레아 학위를 이분화하여 학사와 석사로 구분하고, 25시간을 한 학점으로 계산하는 학점제를 실시하였다.

교육행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교육부(Ministero della Pubblica Istruzione)가 담당하며 대학교육 및 연구분야는 대학연구부(Ministero dell'Università e della Ricerca)에서 전담하는 이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97년 이전에는 교육의 중앙집권화가 명료하여 교육자치가 실시되지 못하였는데, 바사니니법(1997년 3월 15일 법 59호)에 의해 각급 학교는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게 되었다.

지방 차원에서는 현 단위에서 장학관(Provveditore agli studi)이 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파견되며, 각급 학교의 교사는 교육부에 의해 고용되는 국립학교 교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과과정의 경우 1997년 이전에는 중앙정부에 의해 모든 커리큘럼이 제정되었으나, 교육자치제의 실시 이후 주단위의 지방적 성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변모되었다. 또한 모라티 교육개혁이 채택되면서 교육자치는 교육재정자치와 맞물리면서 상당한 저항에 직면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구조조정과 예산삭감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졸업시험 그리고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의 경우, 아직도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의 실시를 위해 정부감독관(Commissari)을 각급 학교에 파견한다.

완전한 의미에서의 연방제적 교육자치가 수용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교육부 권한의 탈중심화가 쟁점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인 흐름은 교육의 주자치제로 수렴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주는 이미 직업교육에 관한 한 권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일반적인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까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탈리아 교육제도 전반을 통해 학교당 이수기한 및 입학과 졸업에 해당되는 나이는 다음과 같다.

<표 5> 이탈리아 교육제도의 수학기관과 취학연령

과정		나이
초등학교(5년)		6세 ~ 11세
중학교(3년)		11세 ~ 14세
고등학교(5년)		14세 ~ 19세
대학교	학사(3년)	19세 ~ 22세
	석사(2년)	22세 ~ 24세
	박사(3~4년)	24세 ~ 28세

제 1 절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의무교육이 아닌 3년 과정의 유치원 교육(*Scuola dell'infanzia*)을 받을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⁶³⁾ 이탈리아의 유치원 교육은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몬테소리 과정이나 에밀리아 과정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중북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 교육에 외국어교육을 가미하는 교과과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⁶⁴⁾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친화력, 심리 및 인지, 도덕, 종교, 사회성, 대인관계, 자율, 창의력 등에 치중되며 초등학교 과정과의 연계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연간 수업시간은 최소 875시간에서 최대 1700시간에 달한다. 또한 정규 학교는 아니지만 유아들이 3세까지의 기간 동안 유아원(*asilo nido*)에 다니면서 사회성을 길러나가게 된다.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5년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교과과정은 국립학교이거나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공통과정으로 운영되지만 맹인학교 등의 특수학교에서는 별도의 교과목을 채택하게 된다. 이탈리아의 초등학교 커리큘럼은 1987년의 대통령령(DPR 104/1985)과 1990년 법(L 148/1990)을 통해 새로운 교과과정(*Nuovi ordinamenti didattici per la scuola elementare*)가 마련되게 된다. 현행제도는 모라티 개혁의 일환으로 재편성되었는데, 의무교육은 초등학교과 중학교 과정을 1기로 하고, 고등학교를 2기로 간주하고 있다.

새로운 교과과정은 중앙집권화된 획일적인 내용에서 탈피하여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교육요구에 따라 교육내용이 변모하는 유연한 형태를 띤 것이었다. 자연과학, 사회연구, 외국어, 음악교육 및 심리교육을

63) D.L. 59/2004. Definizione delle norme generali relative alla scuola dell'infanzia e al primo ciclo dell'istruzione, a norma dell'articolo 1 della legge 28 marzo 2003, n. 53.

64) A. Monasta, *op. cit.*, p. 231.

포함하는 교과목들은 학생 개개인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 교육목표의 차원에서 개발되고 평가되며 수정되는 기제를 갖추게 되었다. 1990/91학년도부터 이탈리아의 초등학교에서는 두 학급당 세 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여타 유럽국가와 유사하게 되었으며, 학교에서의 급식과 오후 수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팀티칭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변화이고 아직 교사들의 입장에서 준비가 충분치 않은 관계로 혼돈을 주고 있다.

이탈리아의 초등학교는 1994년 이후 본격적으로 여타의 유럽국가들과 학생교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능해졌다. 또한 이탈리아 중북부인 볼로냐, 피렌체, 제노바, 밀라노 및 토리노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서유럽과 동유럽의 학교들과의 교류를 본격화하는 교과 이외의 과정을 장려하고 있다.

이탈리아 교육제도에서 중학교는 3년의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 해에 종합시험을 치러야 한다. 중등교육의 근간은 1962년에 마련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이자 종합교육을 전담하는 중학교 과정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 중도좌파정부의 교육개혁에서 일부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탈리아 중학교는 종합교육학교로서 영국의 중학교과 비교하여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가르치는 교과목의 선택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의 모든 중학교에서는 종교교육, 이탈리아어, 역사, 지리, 수학, 과학, 외국어, 기술, 음악, 미술 및 체육교육이 공통적으로 제공된다. 현행의 중학교 교과과정은 1979년의 교육부장관령(DM.9.2.1979; Programmi, orari di insegnamento e prove di esame per la scuola media statale)이 근간이 되고 있다. 이 문헌에서 공화국 헌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제한하는 사회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하며,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의 영역에서 인간이 완전한 참

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이 강조되었다. 교육내용은 매년 작성되는데 개인화된 학습계획이라 명명된다. 중학교 과정은 수업시수는 연간 957시간이며 주당으로는 29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40시간까지 학부모의 요청으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시 연간 198시간 규모의 다양한 특기적성 시간이 마련되는데 모든 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⁶⁵⁾

그러나 이상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학교의 현실에서 나타난 현상은 교실과 공간의 부족, 교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이론중심 교과 등으로 인해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마련된 새로운 교과과정이 일선 교사의 입장에서 실천하기 어렵거나 재교육을 통한 적응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새로운 중학교 개정안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하루의 일과에서 12시 30분 내지 13시 30분에 학교를 마치는 현실은 학교를 단순히 교육하는 장소로 국한시키게 된다. 오후 시간까지 확장된 교육을 위해서는 더 많은 중등교사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재정적 문제와 일부 학부모들의 편견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 학생의 평가에서 점수제를 폐지하고 지속평가제를 도입하여 서술형으로 개선하였으나 이 역시 새로운 시대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직업적 준비가 미비한 데서 기인하는 것인데, 아직도 구술시험 위주의 평가로 인해 교육의 개인화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철학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누적평가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교사는 매 4개월마다 학생 개인에 대한 평가서(scheda di valutazione)를 마련해야 하는데, 1996년에 들어와 1점에서 10점 만점의 누적평가에서 알파벳(A에서 E까지) 기준으로 변모하였다. 매년 말 종합평가에

65) art.10 comma 2 D.L. 59/2004.

서 탈락된 경우 학생은 유급되어 다시 한 학년을 다녀야 한다. 유급되는 사례는 초등학교에 비해 높은 편이며, 대체로 1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남부와 같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보다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기도 한다. 중학교 3년 과정 마지막에는 교사의 주도하에 졸업시험을 치루게 되는데 이때 외부의 감독관이 시험 전반을 관장하게 되어있다.

고등학교는 통상적으로 5년 과정이나 3년이나 4년으로 구성된 경우도 존재한다. 고등학교의 입학시기는 중학교를 마친 나이인 14세에 가능하다.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으나, 중학교 졸업자의 약 90%가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Liceo)와 기술계 고등학교(Istituto Tecnico) 및 직업학교(Istituto Professionale)로 구분된다. 5년으로 구성된 과정을 마치면 국가시험(Esame di Stato) 또는 마뚜리따시험(Esame di Maturità)을 치러야 한다. 이 시험은 매년 6월과 7월에 실시되며 통과할 경우 이탈리아 국립대학의 모든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학교 외부의 심사자로부터 국가시험이 치루어진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Baccalauréat)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마뚜리따시험은 고등학교과정 후반기 3년 동안 수학한 내용에서 출제되며, 3편에서 5편 정도의 리포트작성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구술시험으로 구성되었다. 당시에는 인문고등학교의 졸업자격을 지닌 자에게만 대학의 모든 전공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특혜를 준 반면에 여타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의 전공선택에서 제한을 받았다.

1969년의 개정을 통해 두 개의 리포트, 즉 작문과 해당 고등학교의 성격에 부합되는 주제에 대한 글 그리고 최종학년도에 배운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주제에 대한 구술시험이 부과되었다. 새로운 제도의 실시로 인해 과거에 비해 졸업시험에 통과하는 비율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고등학교 5년 과정을 통해 선별과정을 거친다는 교육철학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탈리아 교육부는 1997년 졸업시험 방식에 대한 재개정을 통해 최종학년도의 교과과정에 대한 구술시험에 더해서 종합적인 교양을 측정하는 세 번째의 리포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일반 고등학교는 1923년 젠틸레 개혁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통상적으로 문리교육(arts and sciences)을 지향한다. 모든 일반 고등학교는 이탈리아 문학과 수학을 공통과목으로 이수하고, 나머지는 고등학교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된다. 이탈리아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된다.⁶⁶⁾

- 인문고등학교(Liceo Classico)는 라틴어와 고대 희랍어를 가르치며, 이탈리아어, 역사 및 철학 분과가 가장 중요하게 간주된다. 통상적으로 인문고등학교 입학자의 약 반수에 해당되는 학생만이 5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자격을 얻게 된다.
- 과학고등학교(Liceo Scientifico)는 지리학, 미적분학, 화학 및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과 수학 분야의 교과과 중심을 이룬다. 과학고등학교에서도 라틴어, 철학, 문학 과목이 심층적으로 이수된다. 인문고등학교로 더불어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는 학교로 인정 받고 있다.
- 외국어고등학교(Liceo Linguistico)는 언어교육에 치중하는데, 영어, 불어, 스페인어 및 독어를 주로 가르치고, 최근에는 러시아어도 교과목으로 도입되었다.
- 예술고등학교(Liceo Artistico)는 예술교육을 전문으로 하며 예술사와 같은 이론영역과 도화같은 실기영역이 동시에 교육된다.
- 기술고등학교(Istituto Tecnico)는 이탈리아 국립기술산업고등학교(ITIS, Istituto Tecnico Industriale Statale) 또는 기술상업고등학교(ITC, Istituto Tecnico Commerciale)로 명명되는데, 여타 학교에 비해 실

66) Wikipedia, Education in Italy. (http://en.wikipedia.org/wiki/Education_in_Italy에서 2007년 10월 10일 검색).

용적인 분야를 지향하며, 항공학, 경영학, 전산학 및 화학과 같은 교과목이 주류를 이룬다.

- 직업고등학교(Istituto Professionale)는 본격적으로 실용적인 교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졸업을 하게되면 곧 바로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양성에 주력한다. 일부 직업고등학교는 5년 과정보다 더 단기의 과정을 운영하기도 하며, 기술고등학교에 비해 전문직업교육의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특징으로 한다.

2006년에 들어선 프로디 2기 정부에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험교육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2008/09학년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변화로는 인문고등학교에서 국제화에 특화하는 과정(Indirizzo ad opzione internazionale), 유럽통합의 정신을 고려하는 과정(Indirizzo classico europeo) 등이 신설된다는 것이다. 이들 교과에서는 외국어, 역사 및 지리과목에 대한 비중이 높게 자리잡고 있다. 또한 지방의 특성을 살린 교과과정(Curriculi dell'autonomia)을 장려하고 있으며, 사회계열에 치중하는 실험고등학교의 운영(Indirizzo scienze sociali)도 고려되고 있다.⁶⁷⁾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젠틸레 개혁 이후 협의의 인문교육을 강조해왔던 그간의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새로운 실험을 위해서는 그에 부응하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게 천명되고 있지 못하다.

제 2 절 대학교

이탈리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만 19세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는 영국이나 여타의 유럽국가에 비해 1년이 늦다. 주된 이유는 이탈리아의 초중등 학제가 5-3-5제이기 때문에 총 13년이

67) http://www.pubblica.istruzione.it/scuola_e_famiglia/classica.shtml에서 2007년 10월 10일 검색.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탈리아의 고등학교가 5년제로 운영되는 관계로 4학년과 5학년에는 미국대학제도에서 교양과목으로 간주되는 교과를 이수하게 되며, 대학에서는 교양과목이 생략된 채 본격적인 전공수업에 치중하게 된다.

이탈리아의 대학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중세기인 9세기에 살레르노에서 의과대학(Universtiy of Salerno)이 설립되었으며, 세계 최초의 종합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볼로냐 대학(University of Bologna)은 1088년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파도바 대학(University of Padova)은 1222년, 나폴리 대학(Universtiy of Napoli)은 1224년, 피렌체 대학(University of Firenze)이 1308년에 개교하였으며, 그 이후로 피사(Pisa), 파비아(Pavia), 토리노(Torino) 등지에서 대학설립이 계속되었다.

오늘날 이탈리아 대학의 대다수는 국립으로 운영되며, 주 단위의 중심도시(capoluogo)에 연구대학(universitas studiorum, Università degli studi di)의 명칭으로 존재한다. 소수의 사립대학들도 존재하는데, 보통 국가에 의해 공인된 형태를 띠며 학위를 수여한다. 대표적인 사립대학으로는 밀라노의 보꼬니상대(Università Commerciale Luigi Bocconi)가 경제학 및 경영학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으며, 성심가톨릭대학(Università Cattolica del Sacro Cuore)과 같은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다수의 대학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탈리아 대학은 볼로냐 프로세스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즉 과거의 단일학위제도에서 대학과정을 3년 과정의 1기 라우레아와 2년 과정의 2기 전문라우레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학사학위 수준인 1기 라우레아만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전문라우레아 과정까지 이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이는 과거 제도로 졸업한 학생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1. 이탈리아 대학제도

이탈리아의 대학제도는 미국보다는 영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학위과정을 통해 한 분과(subject)에 집중하기 때문에 전공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학부과정에서 특정 학부의 세부분야를 전문화기도 한다. 가령 심리학 분야에서 인지심리학, 임상심리학, 산업심리학 또는 진화심리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탈리아 대학은 학년은 두 학기로 나뉘어져 있다. 한 과목은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으며, 시험은 새 학년도가 시작하기 직전인 9월, 학년도 중간인 1월 중순과 2월말 그리고 학년말인 5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학점은 1점에서 시작되어 30점 만점으로 표기되는데, 18점이 통과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이 된다.

학사 및 석사학위 대학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는 종합시험이 요구되는데, 종종 학생의 실험적 작업을 통하거나 기존 문헌의 연구를 통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 평가는 개별 과목에서 이수한 점수를 종합 합산하여 평균을 내고 이를 최저 1점에서 최대 110점 단위로 환산하여 매기게 된다. 개별 교과목의 최저 이수 기준이 18점이었던 반면, 졸업시험에서는 66점이 최저 요구 수준이다. 여기에 논문평가 점수가 3에서 12점정도 가산되어 계산되는데 총점이 110을 넘게 되면 우등졸업(cum laude)의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2. 대학의 조직

이탈리아 국립대학의 조직은 개별대학이 자체의 헌장(Statuto)를 지니고 있으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총장(Rettore magnifico)은 대학을 대표하며 정교수(professore di ruolo di prima fascia a tempo pieno) 중에서 선출된다. 총장 선거에는 교수

진, 연구진, 직원 및 학생 대표가 참가한다. 총장의 임기는 4년이며 일회에 한해 재선될 수 있다.

대학위원회(Senato accademico)는 대학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학 교육과 연구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제반 법규를 제정하는 곳이다. 총장이 의장이며 단과대학장, 직원 및 학생 대표로 구성된다.

행정평의회(Consiglio di amministrazione)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행정활동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재정, 행정 및 학교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주요 업무이다. 총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교원 대표, 직원 대표 및 학생대표로 구성된다.

단과대학(Facoltà)은 여러 문화적 그리고 학문 분야에 상응하여 마련되는 대학의 조직이다. 단과대학은 해당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조정하며, 교육의 자유원칙에 근거하여 교수진을 임명하고, 교수진과 연구원들의 강의내용을 결정한다. 단과대학은 학장(Preside)에 의해 운영되며, 단과대평의회(Consiglio di Facoltà)를 통해 모든 교수진과 연구원, 직원 그리고 학생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학과(Dipartimento)는 연구분야의 활동을 위해 조직된 대학의 구조인데, 관련된 교육과정을 프로그램화하고, 과학적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운영하며, 이를 위한 재정을 조달하고, 연구박사과정(Dottorato di ricerca)을 조직하며, 이외에도 연구활동과 외부기관의 자문활동을 벌인다. 학과는 학과장(Direttore)에 의해 운영되며 학과평의회(Consiglio di Dipartimento)는 교수진과 관련 연구원 그리고 직원과 학생 대표 각 일인으로 구성된다. 학과장의 업무는 행정서기에 의해 보조받는다.

연구센터 및 서비스센터(centri di ricerca e servizio)는, 많은 경우 연구나 일반적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단과대학간 그리고 학과간 연합으로 운영되는데, 이탈리아 대학 내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은 공사립 기관을 통해 그리고 협정을 통한 대학간 센터나 컨서시

움을 형성하여 운영된다. 이탈리아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위한 다수의 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서비스와 복합적 장비를 이용하기 위한 학과간 서비스센터가 활용되고 있다.

3. 학위제도

1999년 교육부령에 의해 마련된 이탈리아의 대학 학위제도는 과거에 비해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해졌으며,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해졌다.

<표 6> 이탈리아 대학학위제도 (교육부령 509/99)⁶⁸⁾

1° ciclo 1st cycle - 1기. 학부과정	titoli accademici 학위	학점	연한
Corso di Laurea - CL라우레아과정	Laurea-L첫학위. 라우레아	180	3
2° ciclo 2nd cycle - 2기 대학원과정			
Corso di Laurea Specialistica CLS전문라우레아과정	Laurea Specialistica LS2차학위, 전문라우레아	120	2
Corso di Specializzazione di 1° livello CS1초급전문가과정	Diploma di Specializzazione di 1° livello DS1 초급전문학위	120-180	2-3
Corso di Master Universitario di 1° livello CMU1초급 마스터과정	Master Universitario di 1° livello MU1 초급 마스터학위	60+	1+
3° ciclo 3rd cycle - 3기 석사후 과정			
Corso di Dottorato di Ricerca CDR 연구박사과정	Dottorato di Ricerca-DR연구박사 학위		3+
Corso di Specializzazione di 2° livello CS2고급 전문가과정	Diploma di Specializzazione di 2° livello DS2 고급전문학위	60-300	1-5
Corso di Master Universitario di 2° livello CMU2고급 마스터과정	Master Universitario di 2° livello MU2 고급 마스터학위	60+	1+

68) Schema Sistema universitario italiano, DM 509/99. (<http://www.cru.it/cru/ECTS/siu.htm>에서 2007년 6월 30일 검색).

(1) 1기 학사과정(Corso di Laurea)

이탈리아 대학의 학부교육은 3년 과정의 라우레아(Corsi di Laurea, CL)인데, 일반적인 과학방법을 습득하고 세부적인 전문적 지식도 연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입학 자격은 정규고등학교에서 국가졸업시험(Esame di Stato)을 통과한 자에 한한다. 대학 이전까지의 수학 연한은 13년이 되어야 한다. 일부 학과의 경우 입학허가를 위해 외국어 실력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개별 학과나 학위과정에서 요구하는 입학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기 대학학위는 3년간의 전업제 수업을 통해 180학점(ECTS)를 이수하게 되어있다. 현재 47개의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개별 학위과정은 다음과 같은 6개의 교과과정으로 구분된다⁶⁹⁾ :

- 한 개 내지 두 개 이상의 분야에서 기본적 교육 과정
- 특정 전공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 인접전공 또는 보조적인 과목
- 선택과목
- 종합시험에 대비하는 준비과목
- 외국어, 컴퓨터, 전산, 인턴과 같은 보충적 기술과목

볼로냐 선언에 충실한 이탈리아의 1기 학위인 학사학위는 다음과 같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 민간 또는 공공부분 기업체의 고용직
- 7급 수준의 공무원직
-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직 활동은 국가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부여된다. 다만 건강의료 분야의 경우 별도의 시험을 요구하지 않음

69) Study in Italy(Italian Higher Educ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New Degrees.
<http://www.study-in-italy.it/study/new-degrees.html>에서 2007년 6월 30일 검색.

- 유사한 전문직이 존재하는 경우, 유럽연합(EU)의 타 회원국에서 전문직 종사

학사학위는 또한 2기 과정인 전문라우레아나 초급마스터학위 과정에 입학자격이 부여된다.

(2) 2기 전문라우레아과정(Corso di Laurea Specialistica)

전문라우레아는 해당 전공분야의 심층적 이론 및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2기 석사학위로서 특정 분야의 숙련된 전문직 뿐 아니라 독립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상위교육과정이다. 1기 라우레아학위 또는 같은 수준의 해외학위를 가진 자에게 입학이 허가된다. 다만 입학을 위해 별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석사과정은 2년간 지속되며 12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109개의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이수 교과목은 학사과정과 마찬가지로 6개의 교과과정으로 세분화된다. 졸업을 위해 논문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이다. 과정 이수 후에 전문라우레아 학위가 부여된다. 이는 볼로냐 선언의 석사학위(Master-level degree)로 인정된다.

석사학위를 지닌 자는 학사학위자가 진출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가능하되 보다 높은 관리직에 부임할 수 있다 :

- 공·민영 기업체 고용직
- 8급(과장급) 공무원에 고용될 수 있으며, 최대 국장급까지 승진할 수 있음
-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으며, 규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도 같은 지위를 보장받음

석사학위를 지닌 자는 연구박사과정, 고급전문가과정 및 고급마스터 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

(3) 3기 연구박사과정(Corso di Dottorato di Ricerca)

연구박사과정은 전문학위가 아닌 학술학위이며 고도로 전문화된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입학자격은 2기 전문라우레아나 이에 유사한 해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주어진다. 입학은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개별 대학의 주도하에 시험이 실시된다. 통상적으로 필기시험(esame scritto)과 구술시험(esame orale)의 2단계로 구성된다. 수학기간은 최소 3년이며 분야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연구박사과정은 5개의 학문영역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데, 수학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개인적 연구프로젝트의 완성이 주요 목표이다. 지도교수의 감독 아래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세미나에 참석하며, 필요한 경우 몇 개의 과목을 수강하기도 한다. 한 학년에서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 지도교수의 긍정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이 과정을 마친 자는 대학에서 연구직을 수행하며, 국가시험을 통해 대학의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정교수직까지 응모할 수 있으나, 다년간의 연구활동과 연구업적 심사가 요구되므로, 교수직을 얻기 까지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대학 이외에도 연구소나 기업체의 실험실 등에서 종사할 수도 있다. 연구박사학위를 수여한 자는 박사후과정의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다.

(4) 초급전문가과정(Corso di Specializzazione di 1° livello)

대학 학위과정의 개혁 이전에 존재한 전문가 과정은 단일 학위제 하의 라우레아 학위를 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러 전문 직업분야에서 전문가 과정을 마친 이후에 졸업장이 수여되었다. 전문가 과정은 특정 분야에서 실용적 목적으로 기술적 지식을 연마하는 코스였으며, 졸업한 자에게는 ‘전문가’ 타이틀이 부여되었다. 당시에는 정

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입학시 시험이 부여되고, 수업에의 참가가 의무이며 수업연한은 2년에서 5년으로 운영되었었다.

새로운 학위제도에서 전문가 과정은 초급과 중급과정으로 이분화되었다. 초급전문가 과정은 숙련된 전문직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탈리아 법체계 또는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라 설립될 수 있다. 이 과정에의 입학은 위해 1기 라우레아 또는 외국의 유사한 학사학위가 요구되며 시험을 통해 입학여부가 결정된다. 과정은 2년에서 3년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최종학위는 초급전문가학위라 지칭되며 120에서 240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수여된다.

(5) 고급전문가과정(Corso di Specializzazione di 2° livello)

3기 과정의 대학학위이며 전문학위이며 특정 전문직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입학은 위해서 2기 전문라우레아 학위 또는 유사한 수준의 해외 석사학위가 필요하며 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과정은 통상적으로 2년에서 6년제이며 이수 학점은 120에서 360까지 다양하다.

고급전문가과정은 치의학, 의학, 수의학, 법률가훈련(변호사, 공증인 및 판사) 및 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교과과정은 이론과목과 실용적 과목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연구프로젝트를 요구하기도 한다. 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고급전문학위가 수여되며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 전문가의 타이틀을 지니면서 자영전문직에 종사
- 특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교육을 마친 공무원직
- 민간 기업에서 고도로 숙련된 전문직
- 유럽연합의 법규의 인정을 받는 경우 타 회원국에서의 전문직

(6) 초급마스터과정(Corso di Master Universitario di 1° livello)

2기 학위과정으로 학술적 성격을 띠기도 하며 전문학위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이 과정의 목표는 특정 분야에서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며 개선된 직업의 기회를 위해 전문교육과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입학자격은 1기 라우레아학위를 가진 자에게 허용되며, 마스터과정 주임교수에 의해 선발과정을 거치게 된다. 과정은 1년간 지속되며 최소한 6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초급마스터과정은 교과목은 개별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마친 자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직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민간 및 공기업에서도 학술적·전문적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7) 고급마스터과정(Corso di Master Universitario di 2° livello)

3기 학위과정으로 초급마스터과정과 같이 학술적 성격과 전문학위적 성격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2기 전문라우레아인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 이 과정의 주요 목표이다. 이 과정 역시 1년간 지속되며 6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석사학위 소지자가 종사할 수 있는 모든 직종에 진출 가능하며 공사업 기업체와 기관으로부터 이 과정에서 이수한 전문지식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다.

제 7 장 결 론

이탈리아의 교육제도는 19세기 말 통일이 되면서 국가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다. 당시의 상황은 문맹률이 90%를 상회하는 것이어서 초등 교육의 확산이 지상과제로 대두되었다. 카사티법으로 알려진 통일 이탈리아의 교육법제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중앙집권적 성격이 현시되어 지방에 까지 중앙의 감독관이 파견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20세기에 들어와 과시즘체제를 맞이하여 더욱 통제 중심의 교육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른바 젠틸레 개혁은 역사와 철학을 교과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함으로써 강한 인문주의적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와 사회변화와 기업의 수요를 무시하는 고답적인 것으로 비판받아왔다.

1960년대 이후 이탈리아의 경제가 선진산업국의 형태로 변모하고 사회가 대중소비단계로 진입하게 되자 교육에 대한 수요도 폭발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상당수가 대학에 진입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이탈리아의 대학들은 과포화와 주차장화라는 오명을 받게 되었다. 또한 단일학위를 유지해오던 이탈리아 대학의 전통으로 인해 타국가와의 호환의 문제, 청년실업의 고착화로 인한 졸업을 늦추는 현상 등으로 대학은 비효율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백여년간 변화상을 보인 이탈리아의 교육제도를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공화국의 헌법에 나타난 교육의 정신을 살피면서 가톨릭 교육과 사립학교, 교육재정, 교사 처우, 학교의 자율 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대체로 보아 교육 개혁의 시도는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83년에 실시된 연구박사학위 제도의 도입은 이탈리아 대학에 상당한 변화

를 가져다 주었다. 비록 실시 초기에는 구제도에서 수학한 연구원들의 강한 저항과 반발에 처하기도 했으나 이십여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2년에 발생한 부패수사(Mani pulite)운동은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가져와 교육분야에도 근본적인 수술이 가해지게 되었다. 1996년에 집권한 중도좌파 정부의 교육수장이었던 베를링게르는 시에나 대학의 총장 출신답게 교육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근본적인 개혁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초중등 교육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문제점이 파악되면서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가장 현격한 변화는 대학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차원에서 논의된 볼로냐 프로세스의 진행은 이탈리아 대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볼로냐 선언이 채택된 1999년에 이탈리아에서 대학의 학위제도가 근본적인 제도변화와 함께 새로운 틀이 갖추어진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로서 이탈리아 대학은 학사 3년, 석사 2년 그리고 박사 3년이라는 국제적인 규격과 조화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에 등장한 우파정부의 교육개혁은 이탈리아 사회 전반에 상당한 논란을 가져왔다. 교육부 장관에 기업인 출신인 모랏티를 임명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문제는 태생적으로 잠재된 것이었다. 모랏티 개혁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세계화 그리고 교육행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교과과정에서 전산, 영어 및 기업에 대한 수업을 강조하였으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인문계와 기술학교를 확연히 구분하여 서로 다른 트랙화하였다. 의무교육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모든 국민이 만 18세까지 일반 교육이던 직업교육이던 받아야 하며 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발상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부분에 대한 개혁에서 교원과 연구원의 신분을 위협하는 단기계약제도와 교원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의도하는 우수 인재의 해외유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영미대학과 비교하여 무상교육에 가깝던 등록금의 문제를 현실화하여 인상시키고, 국가가 책임지던 체제에서 주정부에게 자율권을 주면서 운영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원론적으로 보아 이탈리아의 경제가 지식기반하에서 여타의 산업국가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폭 넓게 수용되지 못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된다.

2006년 재집권에 성공한 좌파인 프로디 2기 정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 피오로니를 임명하게 되는데, 그는 장관직에 오르자 바로 이전 정부의 교육개혁이 중단되어야함을 선언하였다. 이후 피오로니는 다양한 교육제도의 개선을 준비 중에 있는데,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의 개혁이다. 모랏티 개혁에서 구분된 일반고교와 기술고교가 다시금 통합적으로 운영되게 되었다. 또한 모든 현에 한 개의 종합기술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유럽기준에 맞는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기업의 수요에도 부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탈리아의 학교 대부분이 국립으로 운영되던 관행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일종의 재단(Fondazione)을 설립하여 점차로 자율적인 경영을 하며 필요시 개별 학교가 모금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비하였다. 그간 이탈리아 사회에서 소수의 사립학교 대부분이 가톨릭계였던 점을 고려해볼 때 이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보여진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가톨릭 교회와 바티칸은 지속적으로 운영난에 처한 가톨릭계 학교를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교과과정의 운영에서도 오후반의 개설, 교육기회를 얻지 못한 성인에 대한 교육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하여 유연성을 제고하고 학교 재원에 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셋째, 학교의 운영을 책임지는 학교위원회의 구성에 변화를 주려하고 있다. 기존에는 교사, 학부모와 학생 및 직원의 다양한 비율로 참여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재단, 기업단체, 노동계와 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주체들을 포함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새로운 학교개념의 도입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현실 그리고 노동시장 및 기업을 한데로 묶어 지역밀착형이면서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의무교육연한을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직업계 고등학교의 초기 2년 과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새로운 학교개념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수용된다.

이밖에도 신정부의 교육개혁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다. 우선 모라티 개혁에서 전산, 영어 및 경영 분야만이 중시되었다면, 피오로니 개혁에서는 이탈리아어, 수학, 역사와 지리 과목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 핵심적인 교과로 삼고 있다. 현재 실험교육을 진행 중이며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2009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려 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개혁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이다. 과거에는 교과과정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얻으려했다면 새로운 개혁안에서는 결과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에 대한 개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성인교육을 교육제도에 포함하는 것도 새로운 변화라고 판단된다. 성인교육의 비중은 유럽연합의 평균이 11.1%이고 영국의 경우 26.6%인 점을 감안하면 이탈리아의 6.1% 수준은 대단히 낮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탈리아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몇 가지의 성찰이 요구된다. 첫째, 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제고이다. 국제적인 비교에서 이탈리아가 우위에 있는 교육분야는 유치원 교육이다. 몬테소리와 에밀리아 모델은 국내에서도 자주 소개된 교육과정으로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이외의 분야에서 이탈리아는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유럽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대학이 발달하였던 나라이지만, 근대

이후에는 교육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선적인 과제는 유럽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교정하는 것이다. 관건은 정부예산에서 교육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을 어떻게 상향조정할 수 있는가이다.

둘째, 이탈리아 대학은 19세기적 제도운명을 탈피하여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유럽의 다른 국가나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대학 재정의 절대규모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이에 대한 효율적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용이치는 않을 것이다. 우선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가진 모든 학생에게 대학의 문화를 개방하는 입학방식이 개선되어야 하리라 본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는 피오로니-무시(Fioroni-Mussi) 법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핵심내용은 대학의 학부들이 정원제한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5년 과정 중에서 후반부 3년간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월성과 효율성 그리고 업적주의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정원제한제도는 우수한 학생을 대학에 유치하고 결과적으로 대학의 학생수를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부담을 덜려는 이중적인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셋째, 교육의 지역격차에 대한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이탈리아는 서방선진국의 일원이지만 동시에 비대칭적인 지역주의의 현실이 존재한다. 이탈리아 남부는 중북부에 비해 일인당 소득이 낮으며, 유럽 평균에 하회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남부의 중등학교 졸업생들이 중북부의 상급학교나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성격이 우파이건 좌파이건 간에 교육재정의 절대수치가 증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육자치는 재정자립과 연계되며 경제여건이 열악한 남부의 입장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넷째, 교사와 교수에 대한 문제이다. 이탈리아의 교사는 소득수준이 낮은 스페인과 비교해서도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 또한 과거에 교원의 충원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은 우수한 대학졸업자들이 학교를 선택의 직장으로 보지 않도록 만들었다. 여러 정부에 걸친 많은 개혁작업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사의 사기가 저조한 수준이라면 미래지향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이탈리아의 교육제도와 법제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1980년대 이후 이탈리아의 교육현실과 제도는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교육의 근간이 변모하는 상황은 지역연구자의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다. 또한 우리와 같이 교육기본법이 존재하여 일목요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려움을 더한다. 이탈리아의 교육현실이 바람직한 모습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점만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유럽통합과 함께 볼로냐 프로세스에 대해 이탈리아의 교육제도가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럽의 국가들이 서로 교육내용과 인적자원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인력의 이동을 진작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은 동아시아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강한 인문주의적 전통으로 인해 사회변화에 신속한 적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뒤집어보면,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적 교육이 타국가에 비해 강점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역사와 문학 그리고 철학 분야에서 저력을 보이는 이탈리아의 교육제도는 어쩌면 사회변화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온 한국의 현실과 인문학의 위기를 말하는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시사점을 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교육제도의 변화는 이탈리아와 한국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지 않다. 교육의 자치를 말하고 교육

재정의 확충을 주장하는 교육계의 목소리는 양국에서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접근법을 활용하지는 않았으나, 이탈리아와 한국의 현실은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보다 많이 발견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김시홍, “이탈리아의 교육제도 개혁” □□서유럽연구□□, 1998(4): 133-164.
_____, □□이탈리아 사회연구 입문□□, 명지출판사 1995.
_____, 이탈리아의 민주시민교육: 2005 유럽시민교육의 해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지역학회보□□ 2006, 제6집, pp. 33-54
안영옥, “이탈리아의 교육제도”, 275-306쪽, 정종화(편), □□유럽연합국가들의 교육제도□□ 법문사 1997.
최보선, “이탈리아의 교육제도”, 57-77쪽, 효성여대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집□□ 1994.
황규호 외, □□세계의 교육과 중등사학□□, 성문사 1998.

외국문헌

- Alberigo, G., *Il cristianesimo in Italia*, Roma: Laterza 1989.
Associazione Dottorandi e Dottori di Ricerca Italiani(ADI),
<http://distart.ing.unibo.it/dott/>.
Barbagli, M., *Disoccupazione intellettuale e sistema scolastico in Italia*, il Mulino 1974.
Brock, C. and W. Tulasiewicz(eds.), *Education in a Single Europe*, London: Routledge, 2000, 2nd Ed.

참 고 문 헌

- CENSIS, Il Rapporto CENSIS sulla situazione sociale dell'Italia del 1997, Milano: Franco Angeli, 1997.
- Centro Studi Gilda, RIFORME A CONFRONTO. QUEI “10 PUNTI” CHE FANNO LA DIFFERENZA...O L’ANALOGIA.
(<http://www.gildacentrostudi.it/1documentiaconfronto.htm> 에서 2007년 6월 30일 검색).
- Cicatelli, S.(ed.), Scuola in transizione. Raccolta delle principali norme che regolano il sistema scolastico italiano, Roma: Armando 2002.
- EIU, Country Profile Italy 2007, London: The Economist 2007.
-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Research Area: New Perspectives, COM(2007) 161.
- Gentile, G., The Reform of Education, New York: Harcourt, Brace & Co. 1922.
- Giacardi, Livia, “From Euclid as Textbook to the Giovanni Gentile Reform (1867 - -1923) : Problems, Methods and Debates in Mathematics Teaching in Italy”, Paedagogica Historica Vol. 42, Nos. 4&5, pp. 587-613, August 2006.
- Greco, A. G., L'Università e la scuola italiana, Torino, Mimeograph 1997.
- ISTAT, Rapporto sull'Italia. Edizione 1997, Bologna: il Mulino, 1997.
- La riforma Moratti, ultima versione, Analisi dei contenuti della riforma e degli emendamenti al testo introdotti dal Senato. Di Danilo Molinari. Gennaio 2003. (<http://isole.ecn.org/reds/scuola/scuola0301riforma.html>에서 2007년 6월 30일 검색).
- LERU, Doctoral Studies in Europe: Excellence in Researcher Training.

(<http://www.leru.org/?cGFnZT00>에서 2007년 10월 15일 검색.)

Martinotti, G.(a cura di), "Autonomia didattica e innovazione dei corsi di studio di livello universitario e post-universitario", in MURST, Rapporto finale sull'autonomia didattica, Roma, 1997.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Education in France. 30 indicators on the education system, Paris: DEP, 1996.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6, Paris 2006.

Realising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Communiqué of the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Higher Education in Berlin on 19 September 2003.

(<http://www.bologna-berlin2003.de/pdf/Communique1.pdf>에서 2007년 10월 25일 검색).

Rescalli, G., Il cambiamento nei sistemi educativi. Processi di riforma e modelli europei a confronto, Scandicci(FI): La Nuova Italia 1995.

Riforma della scuola, Dalla riforma Berlinguer alla riforma Moratti.

(<http://www.gildains.it/riforma/riforma.htm>에서 2007년 6월 30일 검색).

Schema Sistema universitario italiano, DM 509/99.

(<http://www.cru.it/cru/ECTS/siu.htm>에서 2007년 6월 30일 검색).

Semerato, A., Il sistema scolastico italiano. Profilo storico, Roma: La Nuova Italia Scientifica 1996.

Study in Italy(Italian Higher Educ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New Degrees. <http://www.study-in-italy.it/study/new-degrees.html>에서 2007년 6월 30일 검색.

참 고 문 헌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 Achieving the Goals, Communiqué of the Conference of Europ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Higher Education, Bergen, 19-20 May 2005 (<http://www.sou-lj.si/mp/docs/Bergen-communication-en.pdf>에서 2007년 10월 20일 검색).

Towards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responding to challenges in a globalised world London Communiqué, 18 May 2007 (<http://www.dfes.gov.uk/londonbologna/uploads/documents/LC18May07.pdf>에서 2007년 10월 24일 검색).

Wikipedia, Education in Italy. (http://en.wikipedia.org/wiki/Education_in_Italy에서 2007년 10월 10일 검색).

교육관련 법안

Legge 28 marzo 2003, n. 53(Riforma Moratti), Delega al Governo per la definizione delle norme generali sull'istruzione e dei livelli essenziali delle prestazioni in materia di istruzione e formazione professionale, pubblicata nella Gazzetta Ufficiale, n. 77 del 2 Aprile 2003.

Legge n. 168 del maggio 1989, "Istituzione del Ministero dell'Università e della Ricerca Scientifica e Tecnologica".

Legge 19 Novembre 1990, n. 341, "Riforma degli ordinamenti didattici universitari".

Legge Casati, 13/11/1859 n. 3725.

- Regio Decreto 6 Maggio 1923, n. 1054.
- Regio Decreto 44 giugno 1938, n. 1269, "Approvazione del regolamento sugli studenti, i titoli accademici, gli esami di stato e l'assistenza scolastica nelle università e negli istituti superiori".
-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n. 370 del 31 luglio 1996, "Scuola di Specializzazione per la formazione degli insegnanti di Scuola Secondaria".
-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n. 387 del 3 ottobre 1997, "Regolamento recante disciplina delle procedure per il conseguimento del titolo di dottore di ricerca".
- Legge 15 marzo 1997, n. 59, "Delega al Governo per il conferimento di funzioni e compiti alle regioni ed enti locali, per la riforma della Pubblica Amministrazione e per la semplificazione amministrativa".
- D.L. 59/2004. Definizione delle norme generali relative alla scuola dell'infanzia e al primo ciclo dell'istruzione, a norma dell'articolo 1 della legge 28 marzo 2003, n. 53.
- D.P.R. 11 luglio 1980, n. 382. "Riordinamento della docenza universitaria, relativa fascia di formazione nonchè sperimentazione organizzativa e didattica."